

2020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과제와 역할



스마트도시 서울 연구모임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출문

서울특별시의회 스마트도시 서울 연구모임 귀하

이 보고서를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과제와 역할」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12. 18

- 연구기관 :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책임연구원 : 신현기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 연구원 : 정종원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주성돈 (명지전문대학 행정과 조교수)
- 보조연구원 : 허선형 (가톨릭대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최완식 (가톨릭대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요약문)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과제와 역할

가톨릭대학교 신현기

요 약

본 연구는 2020년 코로나19의 충격 이후에 모든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준비와 대응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수준에서 확인 및 분석하였으며 크게 3개의 질문을 설정하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변화와 앞으로 예상되는 정치, 경제, 사회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역사적 과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방정부의 지방의회 차원의 정책방향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정적 조건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고자 이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에 근거해 미래예측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등을 분석,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에 대한 사례분석(case study) 및 OECD 등 국제기구의 정책권고안에 대한 문헌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서울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어진 자료들을 통해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정치적 변화의 측면에서 국제적 수준에서 지금까지 세계화의 흐름이 약화되고, 민족주의적, 일국주의적 성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내적 수준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따른 작은 정부의 흐름이 약화되고,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큰 정부’의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과 동시에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과거와 같은 성장주의 및 물질주의에 대한 사회적 반성의 분위기가 일어나면서 개인의 건강과 환경보호, 생태적 조화를 추구하는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체적으로 서울시의원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서울시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어 ‘큰 정부’ 이념에 따른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더 나아가 서울시의원들의 정책 입장이 ‘분배 지향’, ‘평등 지향’, ‘국가책임 강화’, ‘사회적 연대’, ‘삶의 질’, ‘환경 지향’ 등을 강조하는 쪽으로 나타나 향후 서울시의 정책도 이를 반영할 것이라 예측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의원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

하는 서울시의 최우선정책으로 보건의료체제 강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또한, 이를 위해 예산 확보 등 지방정부의 재정확충이 필요하며,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미래예측, 해외사례, 서울시의원 대상설문조사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변화를 예측하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방향 등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했지만, 몇 가지 한계도 존재한다.

가장 먼저 미래예측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에 존재하는 어떤 경향을 확대해석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미래예측 자체의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여기서 검토된 미래는 그러할 경향이 있고,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방향은 결국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엘리트들의 정책선호와 시대인식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시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지만, 자료 수집 과정에서 당초 목표했던 전수조사를 하지 못한 채 대상자 절반 정도의 응답으로 분석을 마무리했다. 향후 또 다른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코로나 시대라는 미래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예측하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 본 연구의 의의는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II. 코로나19 이후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	3
1. 정치적 변화	3
2. 경제적 변화	9
3. 사회적 변화	15
4. 포스트코로나 시대 주요 영역별 미래 모습 전망	21
5. 변화된 환경에 대응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	22
6. 시사점	26
III. 해외의 코로나19 대응과 도시정부에 대한 OECD 정책권고	28
1.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28
2. 도시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OECD의 권고	38

3. 한국 지방정부에의 함의	45
IV.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체계 및 활동	47
1. 2015년 메르스 대응 사례	47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 및 활동	54
V. 서울시의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59
1. 설문조사 방법 및 설문응답자 개요	59
2. 코로나19에 대한 서울시 대응 평가	61
3.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변화 전망	69
4. 코로나19 이후 정책 방향	75
5. 시사점	85
VI. 결론	87
1. 연구 결과 요약	87
2. 시사점	91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으로 ‘지금까지의 세계’가 밑둥에서부터 무너지는 경험을 한 시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

코로나19의 충격은 가공할 정도의 전파력으로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했다는 사실 뿐 아니라 바이러스에 의해 그동안 인류가 구축해온 정치, 경제, 사회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하며, 그 속에서 개인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매우 생생하게 보여줬다는데 있음

이러한 21세기 인류의 공통체험과 공통기억은 향후 ‘세계사적 변화’라고 기록될 만큼의 심층적이고, 장기적인 변화의 추동력이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됨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충격을 딛고, 지금까지의 세계에서 누려왔던 안온한 일상을 다시 회복해야 함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세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세계’를 다시 건설해야 할 시점에 있음

-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지금까지의 세계로 복귀한다는 의미에서 ‘회복(resilience)’, 그 세계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극복(upgrade)’라는 이중의 의미가 있음

이러한 이중적 의미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준비와 대응은 세계사적 과제인 동시에 국내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지방의회가 동시에 힘을 합쳐 해내야 하는 과업임

본 연구는 이처럼 모든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준비와 대응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수준에서 분석하고자 함

-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세계는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강점과 약점을 무엇인가
-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는가
- 코로나19 이후 세계의 변화와 우리 사회의 변화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새로운 임무와 역할을 부여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질문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차원에서 답하고자 함

-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변화와 앞으로 예상되는 정치, 경제, 사회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이러한 역사적 과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방정부의 지방의회 차원의 정책방향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정적 조건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이는 유능하고, 신뢰받는 행정과 의정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임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를 진행함

첫째,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나타날 변화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 예측하고 이것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 및 정책방향에 던지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분석함

- 이를 위해서 문헌연구 방법에 근거해 미래예측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등을 분석함

둘째,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각 국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방역에 강한 시스템의 특징과 요건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향후 비슷한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이를 위해 각 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에 대한 사례분석(case study)를 실시하고, OECD 등 국제기구의 정책권고안에 대한 문헌검토를 실시함

마지막으로 결국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정치엘리트라는 판단에 근거해 서울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코로나대응에 대한 평가, 향후 사회정책 및 경제정책의 방향, 서울시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분석코자 함

- 이를 위해 서울시의원 전원 10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이를 바탕으로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준비 현황과 미비점을 발굴하고, 향후 보강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함

II. 코로나19 이후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유행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음. 질병에 대한 공포, 확산 등 개인적인 피해를 비롯해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의 환경변화에 따라 도시정부와 의회의 역할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코로나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일상과 관련된 모든 일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 세계는 그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 과거 전염병은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세계시장을 극변하게 했음

- 최초의 팬데믹으로 알려진 6세기의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은 비잔틴 제국의 파멸시켰고,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은 신권은 하락하고 왕권이 강화되는 현상을 가져왔으며 인구 감소로 인해 당시 경제가 무너져 농업이 쇠퇴하면서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상업을 통한 부의 축적을 통해 르네상스의 기반이 되는 등 사회질서를 뒤집어 놓았음
- 17세기 중국의 흑사병은 거대한 인명피해와 함께 명나라 함몰의 원인으로 이어졌음
- 이러한 팬데믹은 진취적 가능성과 퇴행적 가능성 즉, 양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유럽의 흑사병 사례를 예를 들자면 서유럽은 르네상스와 자본주의로 바뀌었지만 동유럽은 영주들의 억압으로 농노제가 확립되어 경제발전이 뒤처지게 되었음

이처럼 팬데믹 현상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도시정부와 의회는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함

- 특히, 도시정부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한 분석적 연구가 필요함

본 연구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내외적 환경분석을 통해 도시정부와 의회의 새로운 역할 및 책무에 대해 논해보려고 함

1. 정치적 변화

1) 신자유주의와 기능주의 통합에 대한 비판

국제사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에 대한 자각과 함께 상호교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인정하지만 신자유주의 기조는 퇴조

- 자본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capital)에 기초한 경제적 자유주의, 정치적 수단을 통한 시장의 개방, 자유무역, 국제적 분업의 한계를 확인(경기개발원, 2020)
 - 트럼프 현상으로 대변되는 반세계화·신고립주의 그리고 영국의 Brexit와 같은 글로

별리즘의 포기과 반세계화가 전염병으로 확산 및 일반화

- 미국이 일자리 정책에 따른 제조업의 국내 회귀로 국가주의 추세 강화
- 제조업 중심의 국제사회의 분업구조의 변화로 자유무역 질서의 퇴조
-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에 따라 자유무역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와 한국이 추진했던 FTA의 경우도 신흥국보다 주요국 중심으로 재조정을 요구하는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짐

2) 민족주의와 세계화

코로나 19가 한참 확산할 때, 국가들은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민족주의, 국가주의가 국제주의를 압도했으며 그 예로 국가봉쇄가 이루어짐

- 특히 전 세계 코로나19에 대한 초기 대응은 많은 국가에서 민족주의의 강화와 다자주의의 약화로 나타났고, 그 결과 수 많은 국가들이 일방적으로 국경을 폐쇄하고 의약품의 수출을 금지했음
-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의 유럽 국가는 쉥겐조약 (Schengen Agreement)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폐쇄하였고, 미국, 인도 등 많은 국가에서 휴교, 외출제한, 사업장 폐쇄 등과 같은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음
- 봉쇄조치가 '코로나19 확산 억제'라는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비정규직근로자, 소상공인 및 기업 등에 유동성 위기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그동안의 세계화를 추진했던 것과는 다르게 국가 간 연대 대신 차단 기제가 작동하였고 국가별상호 협력을 명시한 조약이나 제도, 관행은 작동하지 않았음
-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으로 국제사회의 변환기적 성격은 더욱 극대화되었고 반세계화, 세력 경쟁, 각자도생, 국내정치 지향 등의 '뉴노멀'현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임. 그리고 중견국·중소 강국을 중심으로 초국가적 新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과 지역협력도 산발적·제한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거리 두기와 고립주의 현상은 역설적임

3) 글로벌 거버넌스 및 국가의 독점적 지위의 약화

국제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초기에 국제기구로서 정보교류,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이후 회원국 간의 협력을 격려하는 데 실패하고 늦은 대처로 효율성을 획득하지도 못했으며 회원국 간의 공동대응에도 미숙하고 미중 간의 책임 공방으로 인해 정당성마저도 의심받게 되었음

- WHO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초기에 강도 높은 대외 검역과 방역을 실시한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이 성공적인 모델로 인식되면서 WHO의 약화를 초래했음
- 무역, 금융, 환경 등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가 약화되는 가운데 WHO의 이러한 미숙한

초기 대응은 글로벌 거버넌스 전체를 약화시켰음

- WHO 사무총장이 2월 초 시진핑 주석을 만나 중국의 통제능력에 신뢰 표명 및 중국 통계의 불투명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중국 옹호
- 미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WHO의 친중국 행보를 비판하며,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상원에 WHO의 코로나19 대처에 관한 조사 촉구
- 국제기구의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과 부적절·비효율적 대응에 대한 비판에 따라 새로운 레짐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
 -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진입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책임론과 함께 국제보건기구에 대한 개혁과 새로운 규범의 논의 전개
 - 독일의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과 유럽연합(EU)의 조셉 보렐 외교정책 대표는 지금은 비난보다 백신 개발 등에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트럼프의 행보를 비판

중앙정부가 책임과 의무의 한계 상황에 처하자 지방정부, 기업, NGO, 개인 등 새로운 행위자가 국제무대에 등장

-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 일본, EU에서 지방정부가 직접 보건국제협력 모색
 - 미국 메릴랜드 주 래리 호건 주지사,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주선한 콜로라도 주는 독자적으로 한국에서 코로나19 진단 키트 직접 공수
 - 한일관계를 고려 일본의 지방정부는 주 센다이 및 주 후쿠오카 한국 총영사관을 통해 익명으로 마스크 구매 및 진단 키트 지원 의사를 타진
- 새로운 종류의 위기에는 새로운 행위자가 새로운 형태의 작동을 통해 중앙정부와 국제기구가 수행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수행
 - 국가를 대신해 핀란드 민간병원 메히라이넨(Mehilainen)이 한국의 재단법인 서울의 과학연구소에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하며 국적 전용기로 검체를 공수하여 위기에 대응
 - 일본의 손마사요시(孫正義)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수술용 마스크, 의료용 안경 등을 수입하여 오사카부 등 지방정부에 지원 약속
 - Social Watch, YMCA, CIVICUS, Pax Christi, 지구촌빈곤퇴치연합(GCAP), 국제평화사무국(IPB), 아시아 발전연대(ADA), 유엔협의자격NGO협의체(CoNGO) 등 50개국 145개 글로벌 NGO 문재인 대통령에 지원 요청

4) 코로나19 책임 공방 가열

현재 국제질서의 두 축은 미국과 중국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이 두 국가의 갈등이 심화됐음

- 중국과의 무역에서 계속되는 미국의 적자와 중국의 남중국해-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는 미국이 중국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위기감을 불러일으켰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서 정의하고, 중국이 국제규범을 저해하는 위협세

력이라고 정의하면서 미 중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음(전재성, 2020). 2020년 1월 양국 간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며 약간의 관계개선이 시작될 즈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였고, 양국은 협력보다는 상호 비난과 갈등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음

-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의 우한연구소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미-중 간의 책임 공방이 시작되었음. 또한, 미국은 우한연구소 유래설과 함께 중국이 늦장 보고와 언론 통제를 통해 은폐함으로써 국제적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중국의 행동은 의료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적 범죄 행위자라고 함
- 이러한 코로나 책임 공방으로 시작된 갈등은 이전부터 야기되어왔던 무역 전쟁이 5G 관련 기술 갈등으로 격화되고 있고, 2020년 6월 홍콩 보안법 발효를 기점으로 미-중 간의 인권 문제로 갈등이 확산되고 있으며 미-중 간의 전략경쟁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대만 문제로까지 이어졌다고 함. 이처럼 현재 양국의 위상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격화되었음

5) 국제 사회의 양극화 심화

저발전 국가는 보건안보 취약성이 한층 더 고조되었음. 아프리카 등 저발전 지역은 이미 코로나 19 이외에도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어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한층 더 심각해졌음

- 국가의 행위규범은 여전히 상대적 이익이 절대적 이익을 압도하는 현실주의 원칙이 지배
 - 자국 우선주의로 국제 공공재인 안보와 질서를 이끄는 강대국의 리더십 상실과 동맹 내부에서 신뢰의 붕괴로 힘의 공백과 무정부 상태 경험
 - 전염병으로 수출금지와 국경봉쇄의 조치로 국제관계의 협력과 신뢰에 타격. 24개국이 마스크, 보호 장비, 인공호흡기, 소독제, 시약재료 등의 의료용품에 대한 공식·사실상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 조치를 취함
- 향후 보건안보가 한층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됨.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저발전 국가는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과 열악한 국가적 시스템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로 인해 국가봉쇄상태이기 때문에 대외 의존도가 높은 저발전 국가의 경우에는 그 손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됨. 각자 도생을 할 수 있는 선진국과는 다르게 저발전 국가는 선진국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큼

1인 미디어, SNS의 성장과 포퓰리즘

- 정치 유튜버들의 성장과 포퓰리즘
 - 정치 유튜버들은 정치를 단순히 선과 악의 대결로 만들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을 모두 악으로 묘사하며 편가르기를 부추이고 증오를 부추임(김찬오, 2020).

○ 가짜 뉴스로 인한 사회적 갈등 심화

-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가짜뉴스를 퍼나르며 갈등을 조장하고 있음

6) 큰 정부 시대 및 정부역할 확대

코로나19를 대처(이동제한, 국가부양책)하는 과정에서 정부 권한의 강화됨(임현 등, 2020)

○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개인과 사회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에 크게 의존하게 되어 국가 역할이 증가하고 권능도 강화되었음.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다고 해도 당분간 세계는 불안할 것이 분명하기에 국가주의 성향도 지속될 것임

- 코로나 팬데믹 등의 블랙 스완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위험이 일상화되는 사회로 전환
- 월스트리트지의 벤 짐머(Ben Zimmer)는 블랙 스완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드물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

○ 성공적인 코로나 위기 대처로 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강화됨(박현석, 2020)

- 우리나라만 해도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k-방역에 앞장서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 “한국판 뉴딜정책은 정부가 2020년 7월 14일 코로나19로 주춤해진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까지 160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재정정책.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New Deal)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처럼,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적 흐름에서 앞서나가겠다는 목표 설정
- 대부분의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외부의 지원 없이 각자 고군분투했고 의료문자 확보를 위한 갈등도 야기되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국가 역할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됨

○ 그러나 국가의 권능이 강화되면서 개인과 사회의 자율성이 약화되어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임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추적 및 모니터링 기술의 발달로 모니터링의 일상화가 우려됨

○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하고 있는 극단 처방들이 뉴노멀로 자리 잡으면서 전체주의적 권력의 공고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임현 등, 2020)

○ 사람들은 건강과 권리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건강을 택할 것임(Harari,

2020)

코로나로 인한 정부역할 확대 및 정부 신뢰도 증가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해외 교민 수용 및 통제 등 정부역할 확대
-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검사, 투명성, 정부와 민간의 협조체계 등의 국내외 긍정적 평가에 따른 국민의 정부 신뢰도 증가
 - 국민의 80%가 "한국 코로나19 대응이 다른 나라보다 낫다"고 평가(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 2020.3.31.)

7) 환경 및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정치적 요구 증가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정치적 요구는 전세계적인 추세임

- 2020년 5월 16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3/4의 사람이 코로나19로부터의 복구에서 환경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한다는 응답했음(Kasrial, 2020)
 - 한국의 경우 70%의 응답자가 동조사에서 코로나19 복구에서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응답함

탄소배출 절감은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임

- 조 바이든 당선자는 미국의 파리협약 복귀를 공언하며 탄소배출 제로를 선언함(안광호, 2020)
 - 이러한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 규제 장벽은 국내 제조업 등 수출 기업들에게 무역 장벽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음(안광호, 2020)
- EU는 EU로 수입되는 제품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가하는 조치인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206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선언했으며 일본 역시 2050 '넷 제로'를 선언함(김정수, 2020)
- 한국 역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함(최우리, 2020)

코로나19 팬데믹의 완벽한 종식은 불가능하며 의료 시스템은 환자 관리에서 건강관리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The Atlantic의 과학전문기자인 에드 용(Ed Yong)은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며,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세계는 대테러에 초점을 맞췄던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공중 보건으로 관심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
- CIFS는 코로나19 이후 의료 시스템이 환자 관리에서 건강관리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에 따라 건강 데이터의 수집 및 공유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

2. 경제적 변화

1) 글로벌 경제침체에 대한 위기 고조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미국 등지로 빠르게 확산되며 2020년 전 세계 경제성장률에 대한 부정적 의견 확산

- OECD, IMF 등 주요 국제기관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 OECD는 2020년 3월에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9%에서 2.4%로 0.5%p 하향 조정했으며, World Bank는 2.7%에서 2.5%로 0.2% 하향 조정
 - IMF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2020년 세계 경제가 역성장을 기록하고 경기후퇴 정도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수준이거나 더 심할 것으로 추정
 - 국제금융협회가 2020년 3월에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하는 등 주요 금융기관들은 전 세계의 경기침체 또는 역성장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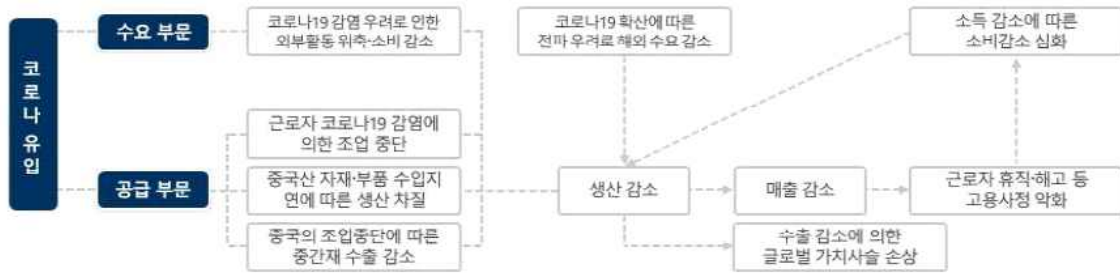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주요 금융기관들의 한국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 주요 금융기관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하며 2020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
 - 무디스(Moody's)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된 점을 고려하여 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 기본 전망치를 0.1%로 하향 조정
 - S&P는 선진국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됨에 따라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에서 -0.6%로 하향
 - JP모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며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0.8%로 하향 조정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은 수요-공급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으며, 그 여파가 국제적으로 파급

- 코로나19 유입으로 인해 스페인 독감 발생 당시와 유사하게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감소시키는 충격 발생
 - 국내적으로 수요 및 공급 감소 충격은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고용 감소 - 소득 감소 - 소비 감소 - 매출 감소'의 악순환을 야기
 - 또한, 코로나19 확산은 자국으로의 전파를 막기 위한 해외수요의 위축을 야기하여 추가적인 수요감소를 초래
 - 국내 및 중국의 중간재 생산·수출 중단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조립/가공단계가 훼손되는 등 글로벌 가치사슬이 손상되는 상황 발생

〈그림 II-1〉 코로나19 국내 유입의 경제적 파급경로



자료: 경기개발연구원(2020. 04). “코로나19 경제위기, 끝은 보이고 있는가?”

- 코로나19 확산의 종식은 경제적 어려움이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 코로나19 확산은 올해 상반기 중 억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소비자의 소득 감소로 인해 국내 서비스 업종의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
 - 산업 전반적으로 발생한 매출 감소 및 실업 증가에 따른 소비자 소득 감소로 인해 국내 서비스 업종의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
 - 온라인 소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소비자의 소득 감소로 인해 앞으로 둔화추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언택트(Untact) 소비 확산 및 소비자 소득 감소로 인해 오프라인 유통 부문 및 대면 영업 등의 업종 역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매출 회복이 어려울 전망
 - 국제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 수요 위축이 지속되어 여행사 및 항공업계의 회복 역시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주요 소비시장 위축 및 글로벌 가치사슬 회복 지연으로 제조업 회복 역시 어려울 전망
 - 주요 소비시장을 위주로 단기간에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했으며, 실업과 재취업 간 비대칭성으로 실업자들이 다시 일자리로 복귀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
 - 실업자들이 일자리로 복귀하여 구매력을 회복하는 속도에 비례하여 공급 부문의 수요가 회복되고, 제조업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국제적인 코로나19 종식 전에는 국제적 분업에 따른 생산 차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제조업 회복이 지연될 전망

2) 신안보의 현실화

국제사회는 군사안보 이외에도 산업안보, 식량안보, 에너지안보와 같은 포괄안보에 대한 인식의 확대로 국내경제의 역량 강화 추진

- 제조업을 저부가가치·공해 유발 산업으로 그리고 서비스업과 지식서비스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하던 산업전략의 전환
 - 선진국을 표방하는 주요 7개국 G7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준으로 제조업

비중을 낮추는 탈산업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했으나 이후 제조업 유치·확대 경쟁 불가피

- 미·중의 통상분쟁에 제조업 안보의 개념이 적용되면서 경제성이 아니라 총괄안보 차원에서 통상 및 산업정책 재조정
 - 제조업 외주(outsourcing)와 관련 인건비를 우선 고려하던 관행에서 산업안보, 제품의 질, 국내고용촉진과 같은 국가공동체 가치를 고려
- 기후변화, 바이오 연료, 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에 따른 식량안보에 대한 경고에 미온적이던 국제사회가 코로나 19로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
 - 인도, 태국, 베트남이 가뭄을 이유로 3월 24일 쌀 수출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40%로 감축하여 수출 재개하고 캄보디아는 쌀·생선 수출 금지
 - 2010년 러시아의 밀 수출 중단 그리고 2006~2008년 및 2010~2011년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 쿼터제로 2011년 소말리아에서 26만 명이 아사

〈그림 II-2〉 2015년 주요국 및 한국의 식량안보지수 및 자급률 변화추이

(단위 : 점 괄호안은 지난해 순위)



자료 :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농림축산식품부, 한국과학기술한림원(2016).

IAP 식량영양안보와 농업: 한국의 전망.

3) 국가 간 및 국가 내 높은 수준의 불평등 현상 심화

국가별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부양정책 혹은 감염병 통제능력에 따라 경제활동 수준 혹은 회복 강도는 차이를 보이거나 양극화될 것임

- 미국, 유럽, 중국 및 한국 등 정책 및 감염병 통제능력을 보유한 국가의 경제활동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이와 상반되는 국가들 주로 이머징 국가의 경제 회복 속도와 금융시장은 불안한 흐름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임
- 생산과 소비간 양극화와 더불어 생산활동 내 혹은 소비 활동 내 양극화 현상도 상당 기간 유지될 것임. 미국과 유럽 내 경제활동에서도 보듯 제조업 체감 지표는 예상보다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소비심리 회복은 더딘 양극화 현상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음
 - 이동 제한으로 인한 제조업 중단 이후 각종 정부 정책에 힘입어 제조업 활동이 빠르

게 회복되고 있는 반면에 소비심리의 경우 실업률 증가에 따른 소득 감소와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소비심리 회복이 제약받고 있기 때문임

- 각 경제주체 내에 양극화 현상도 심해지고 있음. 우선, 언택트 및 디지털 경제 확산 분위기에 편승한 IT 관련 제조업 및 서비스 업종의 생산은 양호하지만, 여타 업종의 생산은 더딘 회복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 소비 부문에서도 고용불안 및 자영업자의 폐업 증가 등으로 소득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음

전 세계의 부와 소득 분위 내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가에 따라 전염병을 경험하는 수준이 결정됨

- 소득 분위 상단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한 재정적 여유가 있으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반면에 소득 분위 하단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함. 그 결과, 불평등은 사회적 위협의 증폭제로 작용하며,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 전체를 위기에 취약하게 만듦
 -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Ian Goldin 교수와 Robert Muggah 교수가 말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고립은 여러 가족 구성원들이 비좁은 방에 같이 살고, 구성원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님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소위 “프레카리아트(precariat)¹⁾라 불리는 많은 근로자들은 수십 년간 임금이 정체되었으며, 고용이 불안정하였고, 건강보험이나 병가와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했음
 - 최근 계약직, 프리랜서, 깃(Gig) 경제 근로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프레카리아트(precariat)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음
 - 일반적으로 이들은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생계의 위협을 받는 집단이며, 대부분의 경우, 프레카리아트(precariat)의 경제적 복지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으며, 이는 가장 부유한 국가에서조차 해결하기 어려움

4) 디지털 변혁과 언택트 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소비행태의 변화

온라인 쇼핑(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가 예상됨

- 언택트 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 급증
 - 통계청의 2020년 9월 온라인쇼핑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4조 72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0.7% 증가함
 - 쿠팡, 11번가, 마켓컬리 등 온라인 쇼핑몰 판매 비중은 지난해 40% 미만에서 올해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배영임, 2020)
 - 영국, 미국,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쇼핑 매출액이 코로나19 이후 확연히

1) 불안정한(precarious)과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n)를 합성한 조어로 불안정한 고용·노동 상황에 놓인 비정규직·파견직·실업자·노숙자들을 총칭하는 용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0; Ali, 2020; 송계숙, 2020)

○ 고령층과 베이비붐 세대의 온라인쇼핑 이용 증가

- 데이터 조사기관 퍼스트 인사이트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쇼핑 장소나 소비방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베이비붐 세대(56~74세)는 2월 28일 26%에서 3월 17일 71% 급증함
-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 사용률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베이비붐 세대도 이 기간 8%에서 23%로 늘었음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의 성장

○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문화의 확산으로 한국에서 배달 서비스의 사용이 급성장하고 있음

- 모바일인덱스가 배달 앱(안드로이드 OS기준) 사용자를 조사한 결과 2020년 8월 배달앱 월간 이용자 수가 지난해 8월에 비해 약 25% 증가함(백주원, 2020)

○ 전세계적으로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 시장은 급성장 중

- 시장 조사기관 statista(2020)에 따르면 전세계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은 연간 성장률 (CAGR 2020-2024) 7.4%를 보여 2024년까지 미화로 1억 8,32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statista, 2020)

비대면 의료 서비스 시장의 확대가 전망됨

○ 전세계적으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 시장은 성장 중

- 글로벌 원격의료 서비스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15.1%로 예상되며, 2019년 414억 달러에서 2027년 1551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Grand View Research, 2020)

○ 미국, 중국, 일본은 이미 원격의료를 합법화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시장 규모가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1990년대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했으며 전체 진료 1/6이 원격의료로 진행되고 2027년까지 시장 규모가 258억 8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배영임, 2020; Polaris Market Research, 2020)
- 중국은 2014년 원격의료를 허용했고 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648억 위안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원격의료 앱 회원 수가 10배 증가(배영임, 2020)
- 일본은 1997년 원격의료를 도입했으며 2018년 부로 원격진료가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원격의료 시장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2019년 시장 규모 199억 엔을 달성함(배영임, 2020; 전국경제인연합회, 2020)

○ 영국 정부는 원격의료를 NHS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실제로 원격의료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김지연, 2020)

- 한국은 코로나19로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며 시행 40여일 만에 원격의료 전수는 10만 9,998회, 진료금액은 12억 8,813만 원에 이룸(배영임, 2020)

OTT 서비스 시장의 성장

-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OTT 시장 규모는 7,801억 원으로 지난해 (6,346억 원) 대비 약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김영석, 2020)
- Allied Market Research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OTT 시장의 규모는 2020년 1,714억 달러에서 2027년 1,039억 달러로 예상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29.4%로 예상했음(Allied Market Research, 2020)

5) 비대면 산업 매출액의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지양하고 비대면 활동을 늘리면서 소비행태와 근로행태, 생산 방식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온라인 쇼핑, 증강 가상 현실, OTT 등 비대면 산업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였음

- 온라인을 이용한 원격 근무가 각광을 받고 있고, 제조업 부문에서도 자동화를 통해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생산 방식을 선호하며 비대면 의료 산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음

재택근무 확산에 따라 원격 업무지원 툴 시장이 확대되면서 줌(zoom),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Teams), 구글의 미트(Meet), 네이버의 라인웍스(Line Works)와 같은 화상회의 서비스 사용자가 급증하였음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불법이었던 원격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됨

- OECD 36개국 중 26개국이 원격진료를 실행하고 있는데, 정부는 2020년 2월 24일부터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화 상담 및 처방, 대리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음
- 원격진료는 오진의 가능성을 두고 찬반 논란이 많았는데, 올해 2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국 3,072개 의료기관에서 10만 3998건의 전화 처방이 이루어지며 원격진료의 효율성이나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문재인 대통령은 디지털 기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확립을 예로 들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음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은 2월과 3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5%, 17.6% 줄어든 반면, 온라인 부문은 34.4%, 16.9% 늘어났음

- 온라인으로는 다양한 SNS 플랫폼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였고 오프라인으로는 비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무인 시스템 도입을 시도하였음

3. 사회적 변화

1) 사회 취약성 표면화 및 구조적 불평등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근본적인 국가 간 격차가 지속되고, 실업자의 수가 급증하였음

- 저숙련 노동자와 저소득층 및 임시 일용직 노동자는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크게 줄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한 사례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음²⁾
- 미국 내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의 피해가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해외 경제 주요 이슈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에서 재취업의 기약 없이 비자발적으로 고용이 종료된 영구적인 실업자의 수가 지난 4월 대비 두 배 가량 급증했다고 언급되어있음
- 즉, 감염이나 실업은 사회 보장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에게 더욱 취약한 면모를 보이며, 이 부분에서 사회 취약성의 표면화와 구조적 불평등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II-3〉 흑인 인구 비중과 코로나19 사망자 중 흑인비율(단위: %)



자료: 존스홉킨스대 · 워싱턴포스트

- 미국의 사례에서는 특히 인종별 차이가 두드러짐
- 미국 남부 지역의 경우 흑인 감염자의 사망자 비율은 백인 감염자에 비해 2.5배 이상 높았음. 이들 지역의 흑인 사망률은 약 47%로써, 흑인 거주 비율이 23%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음(김선자, 2020). 또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 경우 코로나 환자의 70%가 흑인과 라틴계이지만, 중환자실과 같은 집중치료시설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

2) 김진욱, “흑인이 코로나에 더 취약.. 미국 사회 구조적 불평등 드러나”, 한국일보, 2020년 04월 08일

율은 고작 30%로써 비백인 인종은 사망 위험에 처해도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보건 당국이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을 계속해야 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흑인 노동자들은 대중교통 수단 등에서 감염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고, 이를 ‘코로나19 카스트’라 명칭을 붙이기도 하였음. 또한, 흑인 집단 거주지역의 의료 시설이 부족한 것은 물론 아프리카계가 당뇨병이나 고혈압, 비만, 천식 등의 기저 질환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시사하였음
- 프랑스의 학자 Brandily와 연구진들에 따르면, 봉쇄정책이 시작될 당시 감염률이 높았던 고위험 지역과 감염률이 낮았던 저 위험 지역, 그리고 두 지역 내 임금수준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사망자 수 추이를 비교하였을 때, 고위험 지역 내의 코로나 사망자 수와 소득 수준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코로나 사망자 수는 저 위험 지역에 비해 고위험 지역이 50% 이상 많았으나 고위험 지역 내 저소득 지역은 그 차이가 더 커져 88%가 더 많게 나타났음
 - 이 연구는 감염 정도가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중 단기적으로 사회 취약층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Bredily at el,2020:이태훈, 2020)

2) 비대면(Untact)의 활성화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사회 트렌드로 떠오른 것이 바로 ‘비대면’이며,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 교육, 행정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서 인터넷을 사용한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첨단산업의 발달에 따른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점점 고도화되어가고 있음

- 특히 국내의 경우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망과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비대면 시스템이 확충되었음
- 온라인 쇼핑은 물론이고 배달업체도 발달해 웬만한 건 다 배송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넷플릭스, wave, 왓챠와 같은 OTT 서비스도 발달했음
- 이처럼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 장기적으로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비대면 서비스가 발달하고 있음

(1) 재택근무

노동구조의 변화와 관련해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규모 밀집이 어려워짐에 따라 재택근무가 확산되었음

- 재택근무의 경우 주로 근무 인원수가 많고 사내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대기업 위

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재택근무 전환이 쉬운 IT, 스타트업, 서비스 기업이나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공무원 등으로 퍼져나갔음. 재택근무가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 코로나19의 전염성이 끝나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임

- 해외의 경우에도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 일본의 경우 기업 중 52.7%가 재택근무를 도입했으며, 이는 2년 전 조사수치인 19.5%의 2배가 넘는 수치(한국경제, 2020). 심지어 독일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재택근무 확산을 통해 집에서 일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1년에 24일은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하였음(중앙일보, 2020)
 - 재택근무(원격업무)의 생산성이 정상 근무와 큰 차이점이 없거나 더 높은 것으로 평가 됨(한국경영자총협회, 2020; Felstead & Reuschke, 2020)
 - 경총(2020)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 매출 100대 기업 중 53.2%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이전보다 재택근무의 활용이 높아질 것이라 답변
 - 로이터(2020)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인사 담당 임원 4명 중 3명은 코로나 사태가
 - 진정되더라도 더 많은 직원들이 집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함
 - 영국의 Institute of Directors (2020)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958개의 대기업 중 74%가 재택근무를 늘려나갈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홈 오피스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주거 문화와 아파트 설계 개념도 바뀔 것으로 예측됨. 집과 사무실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방에서 휴식하고 업무하고 공부하는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올인 룸(all in room)' 현상이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이며 공간이 넓고, 천장이 높으며, 방이 공기 청정과 에어컨 기능 등을 갖춰야 하는 등 주거 공간의 건축 설계의 개념도 바뀔 것이며 넓은 집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임

(2) 원격교육

학생들의 등교에 제약이 걸림으로써 올 초부터 전국의 모든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원격수업을 받게 되었음. 이러한 원격교육은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 원격수업의 활용 증가가 예상됨
 - 많은 대학과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했고 이를 활용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음
- 수업 현장에서의 모바일 디바이스의 사용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인공지능의 활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됨
 - 미국은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학습 및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을 진행하고 있음(오재호, 2020)
- 코로나 19를 계기로 한국형 무크인 K-MOOC도 많이 보강되어 대학생들은 질 좋고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일반 사회인들도 집에서 각종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 갈 것이라고 예상됨

- 원격수업의 초반에는 불편함과 아직 조건이 잘 갖춰지지 않아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지속적인 설문조사와 개선을 통해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고 있는 추세임
- 원격수업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아 앞으로도 계속 발전될 것으로 보임

(3) 원격의료

IT 기술의 발달과 고령화 사회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로 오래전부터 원격의료의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 코로나19의 출현으로 비대면 진료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원격의료 추진에 더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임

- 원격의료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일반 의료와 비교하여 비대면성과 원격기술 의존성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 이전부터 미국에서는 종합유선방송의 기능을 이용하여 가입자가 자택의 단말기에 혈압이나 혈당치 등을 입력하고 지역 내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는 재택진단서비스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

해외에서도 원격医료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원격의료의 법제화되지 않았는데 진료행위의 안정성,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수가 및 조제 관련 체계 등 문제점이 야기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격의료를 도입하지 않고 있음. 또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와 관련해서 각계 전문가 및 관련자들의 관점이 다른데 그 이유는 원격의료 즉, 현재 비대면 진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필요성과 문제점이 합의되지 않았으며, 추진과정에 필요한 법안과 체계 정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임
- 하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가급적 병원에 가지 않기 등으로 인해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들이 나오면서 조만간 원격의료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임
 - 2020년 2월부터 전국 의료기관에서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 처방 등을 이용한 원격의료를 허용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경증 코로나 환자를 위한 생활 치료센터를 열어 급증한 대구, 경북지역의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였음
 - 여기에는 의료영상 공유 플랫폼, 스마트 활력 징후 측정 장비, 환자모니터링 시스템, 모바일 전자문진 시스템, 재택의료용 앱 등 원격의료를 위한 최첨단 시스템이 도입되었음

앞으로 원격의료, 정밀의학(개인 맞춤형 의학)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나라와 대응하지 않은 나라 간에는 의료 서비스의 수준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임

3) 도시민들의 이동 수단의 변화

(1) 대중교통 이용의 감소

원격업무의 확산과 언택트 문화의 확산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교통량이 코로나 이전의 97.5% 수준으로 회복한 반면 대중교통 통행량은 76% 그치며 대중교통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2020)에 따르면 런던, 뉴욕, 파리, 도쿄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하루 5~10만 명 정도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30%가 원격근로로 전환되게 되는 경우 4~7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거기에 통근자 중 50% 정도가 자가용, 자전거 등으로 통근하게 된다면 2~3백만 명 정도만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됨(ITF, 2020)

(2) 도보 및 자전거 이용의 증가

타인과 접촉이 많은 대중교통 이용이 감소하고, 단독으로 이용하는 승용차 이용이 증가

- 영국의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영국 도시들의 대중교통 이용자는 약 20% 감소하고, 자가용 이용률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도심지 통근자는 대중교통의 차내 혼잡과 도로교통 혼잡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퍼스널 모빌리티 선호

- 코로나19 이후에도 단기에 대중교통의 차내 혼잡률을 낮추기 어렵고, 도로교통의 혼잡이 예상되므로 도심지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률은 증가할 전망이다
- 코로나19로 다른 사람과 이동 수단을 공유하는 공유 모빌리티 이용률 감소를 예상하였으나, 도심에서 퍼스널 공유 모빌리티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콜롬비아 보고타, 이탈리아 밀라노, 독일 베를린, 미국의 필라델피아와 뉴욕은 자전거에 더 많은 도로 공간 할당

-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는 대중교통 혼잡 감소,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기질 개선 등을 위해 기존 35km 임시 자전거 차로 개통
- 이탈리아 밀라노는 섯다운 해제 시 대중교통의 혼잡 완화 정책으로 증가할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중심가로(Corso Buenos Aires) 35km 구간에 자전거 차로 계획
- 독일 베를린은 최근 10개 도로에 임시 자전거 차로(Pop-up Infra)를 개통했으며 133개의 다른 도시와 함께 팝업 인프라를 확장할 계획임
- 미국 필라델피아는 시민들의 청원에 따라 간선도로 7.0km 구간을 자전거와 보행자가 전용으로 이용하는 임시 자전거 도로로 전환

코로나19 이후 대중교통에서 승용차로 통근 수단 전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심지 임시 자전거 차로(팝업 인프라) 확충 필요

- 인터파크가 5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전거 카테고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권신규, 2020).

(3) 공유 마이크로 모빌리티 이용의 증가

공유 자전거를 짧은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찾는 사람들이 늘어남

- 코로나19로 인한 서울 도심의 공유 모빌리티(자전거, PM 등) 이용률 증가 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수도권 도시에 임시 자전거 차로 설치 필요
-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객수는 전년 동기대비 33.8% 증가함
-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 2020에 따르면 카카오 T 바이크를 이용하는 횟수는 지역을 불문하고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3개월 즉, 올해 4월~7월 간 전년 동기 대비 가용기기 1대당 이용 횟수는 월 평균 약 27%, 이용완료 이용자수는 월 평균 약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 리포트의 자료에 따르면 평일에는 오전 7~9시 출근 시간대 한차례 피크 타임이 나타났고, 오후 5~7시 퇴근 시간대에도 피크 타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공유 전동 킥보드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예정임

- 서울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에 따르면 서울 지역 공유 전동 킥보드의 월별 이용 건수는 지난 3월 143만 5,143건에서 8월 360만 1,629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3~8월 누적 이용 건수는 총 1,519만 107건으로 지난해(7~12월) 이용 건수(350만 여건)과 비교하면 4.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제, 2020)
- 조사에 따르면 2024년까지 공유 전동 킥보드가 전세계적으로 460만대가 운영될 것이며 이는 2019년 774,000대가 운영되던 것에서 증가한 것이다(Perry, 2020)

4)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급증으로 시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

- 호주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초대형 산불이 발생해 6개월 동안 지속됐고 이로 인해 최소 33명이 숨지고 1천10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피해를 입음(송은미, 2020)
- 2020년 한반도에는 역대급으로 긴 장마와 3번의 태풍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음

도시민들의 깨끗한 공기와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됨

- 도시봉쇄와 고강도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교통량, 경제활동의 감소는 도시민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선사함
-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소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또는 전부 봉쇄를 실시한 34개국의 대기에서 이산화질소는 평균 60%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천권필, 2020)
- 중국의 도시 봉쇄 이후 한반도의 대기질이 향상됨(천권필, 2020)

4. 포스트코로나 시대 주요 영역별 미래 모습 전망

코로나 이후 주요 환경변화가 크게 영향을 미칠 8대 영역을 도출하고, 영역별 변화동인 도출(KISTEP, 2020)

〈표 II-1〉 8대 영역별 변화동인

영역	변화 동인
헬스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 의료 시스템의 단점 및 글로벌 의료 시스템 협력 체계 취약성 부각 • 기존 치료 중심 의료 시스템에서 예방·관리 중심의 공중보건 시스템으로 패러다임 변화 • 의료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인공지능화, 자동화, 데이터 공유 등) 가속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개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따른 학교와 가정에서의 혼란(온라인 교육콘텐츠 및 인프라에 대한 우려와 취약계층 긴급 돌봄 등 교육복지 사각지대 노출) • 단주기적 신종 감염증 출현 가능성에 대한 학교의 사전 대비 중요성 대두 •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필요한 역량의 변화로 이어지고 이는 교육의 변화를 추동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팬데믹 대응 교통수단 이용의 언택트 문화 확산 • 특히 대도시의 고밀도 대중교통 및 공유교통 이용 기피 확산 •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한 인식 제고 • 개인 교통(Personal Mobility) 및 초소형 모빌리티(Micro Mobility) 차량 수요 증가
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계적인 봉쇄조치, 이동제한, 생산중단으로 인한 국가 간 물동량 감소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물리적 거리두기로 국내 온라인, 비대면 구매 폭 발적 증가 • 정밀한 배송서비스 수요 확대에 따른 제조-유통-물류 산업간 경계 약화와 경쟁 격화
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팬데믹 대응 및 경제 회복 상황 • 글로벌 밸류체인의 취약성 대두(지역 밸류체인의 부상 등) • 제조공장/장비의 스마트화(인공지능화, 디지털화, 유연화, 학습 등) • 제조비용(재료비, 인건비, 제조비 등) 지속적인 증가 및 생산인력 감소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기후변화 후순위 및 환경규제 역할 변화 • 코로나19 감염자·격리자·의료인 사용 폐기물 발생량 증가 • 언택트 경제 확산에 따라 편리한 소비 추구로 일회용품 사용량 증가 • 첨단과학기술(AI, IoT 등)을 융합한 환경기술의 스마트화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산업 타격 및 비대면 문화콘텐츠 증가 • 홈이코노미와 싱글이코노미 가속화 • 문화산업 제품/서비스의 제작 유통 소비 변화 •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한 ‘코리아 브랜드’ 가치 상승
정보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상회의,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확대 •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재난 시 정보를 활용한 대응의 상충 • 국가공공(국방, 치안, 소방 등) 안보체계의 스마트화(AI, 빅데이터, 로봇)

자료: KISTEP(2020. 01). 미래예측 브리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전망 및 유망기술』

5. 변화된 환경에 대응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

1) 저탄소 사회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마이크로모빌리티 이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늘어난 이용에 대한 대책 필요

- 늘어난 자전거와 전자 키보드의 이용에 대응하여 LIT(경량 개인 교통) 차선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LIT 차선 설치에 교통 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임시 차선 등을 통해 설치되고 있음(ITF, 2020)
 - 긴급 LIT 인프라는 2020년 3월 중순 기준 베를린, 보고타, 멕시코시티, 뉴욕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오클랜드, 바르셀로나, 보고타, 일드-프랑스의 지역 등의 도시들은 LIT인프라 설치에 더해 도시 전체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자전거 이용자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중(ITF, 2020)
 - 이러한 LIT 설치에 자동차 교통량의 감소 보행자에게 넓은 이동공간을 제공하여 거리 두기에 용이할 것으로 보임
- 공유 마이크로모빌리티가 거리에 무질서하게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관소의 수를 늘리는 것과 같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전기차, 수소차 이용 장려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 현재 한국의 전기차 충전소는 8,080개로 2020년 현재 전기차 보급대수가 10만대인 것에 비하면 턱무니없이 적음. 따라서 접근성이 용이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의 건설이 필요
- 한국의 수소 충전소는 전국에 29기로 일본 112곳 독일 81곳에 비하면 적은 수준(변지희, 2020)

2) 디지털 변혁과 언택트 사회의 도래에 대한 대응 필요

디지털 시민참여 소통기술 개발

- 컴퓨터가 없거나 사용 방법을 모르는 사람,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사람 등 온라인을 통한 참여 준비가 되지 못한 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 제한적으로 오프라인과 동시 진행
- 다양한 온라인방식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고 의사를 편리하게 전달하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 피드백을 통해 소통능력을 향상

언택트 시대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필요

- 홀몸노인 등의 집에 AI 등과 같은 장치를 보급하여 건강 상태와 고독의 문제를 해결
 - 코로나19는 고령자·임산부·영유아 특히 고혈압·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치명적
- 화상 만남이 가능한 기기를 설치하여 도시 봉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사회와의

단절을 예방함

디지털 격차에 대한 대책 필요

- 미국 보스턴시의 경우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무료 핸드폰과 핫스팟을 제공하고 있고, 공립학교의 학생들 중 필요한 학생들에게 크롬북을 제공하여 디지털 격차에 대응하고 있음(OECD, 2020)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생활이 보편화 되면서 재택근무, 원격교육, 원격의료, 주문형 배달 서비스와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 생활에 익숙해졌음. 하지만 아직 잘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의회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갖춘 상태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은 재택근무의 도입을 확대하는 효과를 유발했지만, 재택근무에 따른 어려움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작은 기업부터 직면할 것으로 예상
- 재택 콜센터처럼 완전한 재택근무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재택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직장과 집에서 나누어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 촉진
- 정보통신 분야의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시도를 도시정부는 도시공간에 적용하고 상용화하는 과정이 필요함

3) 원격업무 확산으로 인한 변화 준비

사무실의 축소로 인해 도심 오피스 공실률 증가와 거점 오피스 증가에 대한 준비 필요

- 빈 사무실에 대한 활용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학원이나 학교와 같은 교육서비스, 금융보험, 정보서비스 산업 분야처럼 화이트칼라 직군의 재택가능 업무 비율은 높은 반면, 육체노동 강도가 높거나 장비를 사용하는 블루칼라 직군의 재택근무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KBS News 2020)
 - 일반적인 사무실 공간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스마트워크와 같은 공유사무실에 대한 수요도 동시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

지방 도시정부들은 대기업을 위한 사무실 축소와 거점 사무실의 증가를 인구 유입과 지방도시의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함

- 서울과 수도권의 높은 집값에 버티지 못하고 밖으로 밀려나는 젊은 1인 가구들의 유입을 적극 유도하고, 거점 오피스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함

4) 신속한 경제지원 필요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경제활동의 둔화를 동반함

- 코로나19의 전염성을 막으려면 사회적 거리두기, 휴교, 이용시설 제한 등 사회적 접촉

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경제적 활동은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음. 그래서 경기침체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만 하는 기회비용임

- 경제·사회적 양극화 심화에 대비한 약자계층 배려 확대
 - 여행·항공·식당·숙박 관련 소상공인, 연극·영화·공연 부문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실업의 위험은 높은 반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제적 약자계층과 신기술에 익숙지 않은 사회계층 배려
 - 노인·기저질환자·임산부·영유아 등 면역력이 약한 취약계층의 피해 최소화 방안 제시
- 하지만 이러한 소득과 매출 감소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재무 상태 악화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도시정부와 의회는 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이동제한 조치가 유지되는 동안 경제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지역주민의 유동성을 최대한 유지·확충할 수 있는 경제적 직·간접 지원정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됨

- 선택적 원천징수제도의 일시적 확대를 통해 근로소득자의 실제 수령 소득액을 증가시켜 경기침체 및 불황 기간동안 생활비 등 필수적 경비 지출을 위한 예산제약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며 고용을 통한 소득 유지가 가장 효율적인 소득 지원 방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COVID-19에 따른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요건을 불문하고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기업 및 자영업자가 한시적으로 차입금 상환을 뒤로 미루고 부족한 운전자금을 신규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기업 및 자영업자의 경우 중간재 부족이나 인력 부족 등이 발생하면 생산차질을 겪게 됨. 또한, 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 부진도 나타남

5) 감염병 확산의 차단을 위한 도시 구현을 위한 계획 필요

도시정부는 방역에 힘쓰고 질병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함.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추적하여 감염 차단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평시에도 집단이용시설물에 대한 배치기준을 강화
- 비상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실현이 가능하도록 시설물 이용기준을 개정
- 한국이 감염병 초기 대응에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감염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이를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스마트 시티가 구현되어 있기 때문이었음(OECD, 2020)
 - 지금처럼 앞으로도 방역에 대해 도시정부와 의회는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대응과 개방성·투명성·민주성 등 3대 원칙 하에 많은 검진을 통한 확진자 발견, 감염경로 추적,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격리 후 출국 금지 조치, 생필품 사재기를 하지 않은 높은 시민의식, 정부와 지자체의 공격적인 대응(드라이브 스루, 진단키트, 생활 치료센터 활용, 자가격리 권장), 사회적 실천 운동(손 씻기의 생활화, 마스크 착용의 생활화, 사회적 거리두기, 대규모 집단행사 자제하기)등 일상생활이 크게 제한 받지 않는 민주적 통제 속에서 방역효율을 제고할 수 있었음

- 다만 이러한 개인정보가 감염병 차단 이외의 목적에 쓰이지 않도록 투명한 정보공개할 필요성이 있음

대중교통수단의 방역·서비스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통한 이용률 확대

- 대중교통 이용객의 감소는 철도역, 버스터미널, BRT 정류장 등을 중심으로 추구해온 역세권 개발과 중심지 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임
- 지능형 교통수단에 초점을 맞춰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과 투자가 이뤄져야 하나 대중교통수단을 활성화하지 않고는 대도시의 교통 문제해결이 불가능함을 명심

민간 집단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새로운 설치·운영 기준 마련 필요성 증대

-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같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민간이 영리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

6) 스마트 경제외교 추진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는 국가를 넘어 지역으로 확산되었음. 이에 대해 세계 각국은 다양한 경제 위기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음

코로나19 팬데믹은 4차 산업혁명의 속도를 촉진시키는 촉매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도시는 미래 산업과 GVC의 중심지가 되어 혁신산업,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적 경제외교의 추진이 필요함

7) 도시 간 문화, 보건 등 교류 활성화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정부는 관용적이며 개방적인 도시 간 문화교류의 추진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됨

- 현재 국제적으로 거리두기, 글로벌 거버넌스의 약화 등으로 인한 각자도생, 반세계화, 민족주의 등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선진국의 리더십 부재는 서구에 대한 실망과 문화적 매력 하락을 초래했음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제사회는 한동안 국가 간 거리두기를 지속할 가능성이 큼

- 도시의 경쟁력을 살리려면 도시 간 쌍방향 교류로 열린 도시교류 추진이 필요함. 이를

위해선 도시 간 문화,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함

-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긴 했지만, 성공적이라고 평가 받던 서울시의 S-방역 등을 다른 수도권이나 지방 도시의 벌어들일지 모르는 펜데믹 상황에 대비하여 방역체계를 공유하는 등의 활동이 필요함
-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개인의 협조와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제고되었기 때문에 대상, 지역, 주제에 따른 다층적이고 협력적인 맞춤형 도시 교류 추진은 필수적임

국내간 도시 교류뿐만 아니라 도시 외교 또한 중요하다.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저발전 국가와 도시에 보건의료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선진국들이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 현상을 심하게 겪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국제 리더십 부재와 자국 중심적 대응은 글로벌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큼
- 이러한 상황에서 펜데믹이 장기화될 경우 저발전 국가와 도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커질 것임. 따라서 국외 다른 저발전 국가나 도시를 대상으로 보건장비, 보건 인프라 구축, 의료인력 파견과 같은 보건의료 사업 추진이 필요함

6. 시사점

사회의 모든 초점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 집중됐고 기존의 사회, 경제, 정치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음

- 사회가 점점 스마트해지며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일상이 가능한 시대를 향해 가고 있지만, 감염병 때문에 체험하게 된 다양한 시스템은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음. 그러나 혼란했던 몇 개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가능성을 확신했으며 코로나 이후의 상황도 계속해서 생각해봐야 함. 수개월 간 우리 몸에 스며든 행동 패턴과 생각의 전환은 앞으로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 때문에 추후 상황과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첫째, 코로나19 시대 즉 불확실한 시기에 대한 적응성과 대응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함

- 대응력 있는 리더십을 갖춘 도시 정부는 사회적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대응하고, 이후 중, 장기적 복원 비전도 제시해야 함

둘째, 추가되는 지원정책은 간접적인 지원보다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함

- 강력한 피해극복과 경제활력 보장을 위해 신속하게 지원할 방안이 필요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지원, 특별 금융지원, 세 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피해가 큰 관광업에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국민 관광 상품권 지급 등 지원이 필요함
- 또한, 관광업의 위기에 대응하고 침체한 관광시장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력하여 관광업계를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이 필요하며 관광상품 개발, 위기 대응 기금 조성 등 장기적으로 대응할 방안이 필요함

셋째, 각 지역 내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 필요

- 이번 추경을 통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임
-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외에 소득, 복지, 보건, 의료 고용 등에서 극심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인구 계층이 약 10%인 것으로 추정할 때, 외부에 존재하는 한계가구의 발굴 및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 역시 필요함

넷째, 새로운 구조를 갖춘 사회서비스 개편이 필요함

- 기존 개별시설 중심의 복지 욕구 파악과 서비스 제공 형태가 아닌 통합적인 접근 즉 욕구 및 서비스 관련 정보와 기술을 수요자와 공급자가 공유하면서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플랫폼 구축과 활용이 필요함

-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 엄청난 성과를 보이게 되면서 이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즉, 클라이언트 개별화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 ICT에 기반한 복지 기술 개발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와 같은 지방정부와 의회의 역할도 중요하나 그 어느 때보다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함

- 즉 이러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체계적인 협력과 적절한 역할 배분이 필요함
- 앞으로 공공서비스를 정부와 민간이 공동생산하는 범위와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기에 민간 부문의 역량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게 필요함
- 모든 사회문제를 정부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사회구성원들 스스로가 문제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정하는 점 역시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음

Ⅲ. 해외의 코로나19 대응과 도시정부에 대한 OECD 정책권고

1.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1) 대만

대만의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1월 25일 기준 총 확진자는 625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방역에 성공적인 국가들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³⁾

- 대만은 1월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3월 20일 27명이 발생하여 하루 발생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11월 현재 하루 확진자는 0명으로 최근 가장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날은 11월 13일 8명이 발생하였으며, 12월 0명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대만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대부분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즉 대만 국내에서 감염된 확진자가 없는 상황임(2020년 12월 현재)
-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주민 통제가 원만히 이루어져 경제적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음

대만의 코로나19 대응은 출입국 관리 및 통제, ICT 기술의 적극적 활용, 마스크 실명제와 같은 방역물자 관리, 지침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로 정리할 수 있음

대만은 2019년부터 중국과의 양안갈등으로 인해 중국 본토와의 인적 교류가 막혀, 초기 대응에 매우 유리하였으며, 코로나19가 동시에 출입국 제한 및 통제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초기 확산을 억제할 수 있었음

- 대만이 2019년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무기를 구매하자, 이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로 2019년 8월 1일 자로 대만에 대한 여행 금지와 대만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실시하였고, 대만 역시 같은 보복 조치를 취하게 됨에 따라 인적 교류가 급격히 줄어들어 중국으로부터의 확진자 유입 차단이 매우 효과적이었음
- 1월 말 중국, 홍콩, 마카오 등 중국 전역에서의 대만 입국을 불허하였으며, 2월에는 중국으로의 출국 역시도 불허하기 시작하였음
- 3월 19일부터는 거류증, 외교공무 증명서, 비즈니스 이행증명서 소지자와 기타 특별 허가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였음
-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내외국민들에게 2주 격리를 의무화하였고, 개인정보 수집의 허위 기재 및 검역통지서의 부정확한 작성 등에 대하여 '전염병방지법'에 의거 최고 15만 대만달러(약 58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음

3) 대만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오윤미(2020), 이희영 외(2020)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가독성을 위하여 별도의 내주 및 각주를 삼가함.

ICT 기술을 활용한 정보공유 및 관리 시스템 구축, 활용

- GPS 지리정보시스템 및 클라우드 시스템 등의 ICT 기술을 활용하여 출입국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와 의료기관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방역 및 검역의 효율성을 높였음
- 1월 27일부터 출입국 자료를 대만 건강보험 클라우드 시스템에 연동하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 출입국 자료가 제공됨으로써 진단과 방역, 치료가 신속히 이루어지게 함과 동시에 감염의 전파와 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1월 29일부터는 모바일 지리정보시스템 GPS를 활용하여 진단·검역대상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실시하였음
- 출입국 자료를 활용하여 공항에 입국검역시스템을 마련하고, 해외 출국자 및 입국자 등 여행객들의 출입국 정보는 물론, 이들에 대한 방역추적시스템과 2주간의 자가격리 및 검역, 진단 관리와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였음

방역물자 관리: 마스크 실명제를 실시하여 수급을 효과적으로 통제

- 대만 정부는 호흡기 바이러스성 전염병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필수적인 물자라 할 수 있는 N95 및 의료용 마스크의 수출을 1월 24일 금지하고, 1월 30일부터는 해외 출국자에 대해서도 휴대 반출 분량을 1인당 총 250매로 제한하여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하였음
- 마스크 실명제를 2월 6일부터 실시하였으며, 1인당 제공 수량과 가격을 통제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필수품인 마스크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음
- 마스크 실명제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시행되었음. 그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나라에도 해당 정책을 유사하게 3월 9일 ‘공적마스크 5부제’ 제도를 통하여 적용하였으며, 시행 초기 혼란이 있었지만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되어, 마스크와 관련된 수급 문제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음

〈표 Ⅲ-1〉 대만의 마스크실명제 정리

구분	마스크실명제 1.0	마스크실명제 2.0	마스크실명제 3.0
시행일자	2020년 2월 6일	2020년 3월 12일	2020년 4월 22일
판매처	지정 약국/드리그스토어	-지정 약국 및 드리그스토어 -Mask 사이트 -국민건강보험앱	-지정 약국 및 드리그스토어 -Mask 사이트 -국민건강보험앱 -4개 편의점 체인
구매방식	현장구매	-현장구매 -온라인/모바일 예약 구매 (1건 물류처리비 7달러 추가)	-현장구매 -온라인/모바일 예약 구매 -편의점 키오스크 예약 구매 (1건 물류처리비 7달러 추가)
	-신분증 끝번호별 가능 요일 -홀수: 월/수/금 -짝수: 화/목/토 -일요일: 모두 가능	-실명제 1.0 구매 방식 유지 -4/9 이후 수령일 자율지정 -예약구매 후 4대 편의점 체인 방문수령	-수령일 자율지정 -편의점 예약구매/수령 가능
기타	외국인 건강보험카드, 거류증, 출입국허가증 증명서 번호로 요일지정 가능	예약구매-결제-수령의 단계를 일정 기간 시간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	-예약과 동시에 결제 -4개 편의점 체인에서 마스크 수령과 동시에 예약 가능 수량의 사전 구매 가능

자료: 오윤미(2020: 7-8)

지침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였으며, 방역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었음

- 대만에는 우리나라의 ‘감염병예방법’에 해당하는 ‘전염병방지법’이 있으며, 보다 강화된 방역을 위하여 2월 25일 ‘코로나19예방치료구제진흥특별조례’를 제정하여 자가격리, 자가검역 등을 위반하거나 방역물자에 대한 정부 지침을 위반하고 부당거래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
-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15-30만 대만달러(582-1,165만원)의 벌금을 20-100만 대만달러(777-3,888만원)으로 상향, 강화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자가검역 위반자의 경우는 10-1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였음
- 이러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만 정부의 방역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나아가 비용 발생 시 가중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음
- 방역 및 위생 관련 정부기관 지시를 불이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확진자 또는 확진 의심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2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음

- 방역물자를 사재기하거나 투기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의 징역 및 5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미수범 역시도 적발시 처벌 받도록 하였음
- 자가격리자와 자가검역 대상자에게는 방역 감독 및 격리장소 이탈 확인, 대상자 상태 확인 등을 위하여 전용 스마트폰을 제공하고, 휴대를 의무화하였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만 정부의 중장기 대응은 방역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민생안정과 경제충격 완화, 고용 및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고 있음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긴급생활자금 지원, 대출 지원, 취업 수당 지급, 고용안정 수당 지급, 근로훈련 수당 지급, 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국 진출 기업의 대만 복귀 투자 독려 지원정책 등을 실시하였음

대만의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하여 매우 긴밀한 의사소통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수도인 타이베이에서 도입된 정책이 다른 도시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협력을 유지하였음

타이베이시 커원저 시장은 외과의사 출신이어서 중앙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등 다소의 마찰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추었음

대만 역시 2003년 사스 사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 방역전문가를 양성하고, 위생서를 질병관리국으로 승격, 조직을 강화하여 공공위생과 방역, 전염병 관리에 있어서의 체계를 강화하였음

현 라이칭더 부통령, 위생복지부 장관, 행정원 부원장, 타이베이시장 등 주요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의사 출신인점, 천젠런 부총통, 천치마이 행정원 부원장의 경우 2003년 사스 사태 때 방역 정책 수립에 참여하였던 점이 대만의 코로나19 대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평가됨

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과 정부 정책 협조 역시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2) 독일

독일은 2020년 11월 25일 현재 99만 5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12,510명의 사망자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하였음. 1차 대유행 이후, 10월을 기점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1일 2만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 독일은 코로나19의 1차 대유행 당시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되었으나, 최근 급격한 확산세를 막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⁴⁾

- 1월 27일 남동부 지역인 바이에른주 슈타른베르크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중국 이외 국가에서 친족 관계가 아닌 사람 간의 감염이 이뤄진 첫 케이스이기도 함.
- 2월 24일까지 귀국치료자 포함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3월이 되면서 급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며, 3월과 4월 하루 3,000-6000명 사이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음
- 독일의 사망자 집계는 확진자 중 사망자 통계이며, 확진자가 아닌 사망자에 대해서는 사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사망자 통계가 정확하다 할 수 없으며, 집계된 사망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병원과 요양원을 통한 집단 감염이 매우 심각하였으며, 다수의 사망자 역시 병원과 요양원 확진자 중에 발생하게 됨.

- 병원과 요양원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게 된 것은 감염병에 취약한 환자와 노인들이 많았었던 것도 있지만, 병원과 의료 시설들이 낙후되었고, 이러한 기관들의 운영 및 경영 상태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열악하였던 점, 의료장비의 부족, 의료진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 등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독일 연방정부는 지역별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긴급 지원하게 됨

유럽 전역으로 코로나19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자 3월 18일 유럽연합(EU)의 유로존 국경 폐쇄에 조처에 따라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은 국가의 시민들이 유럽연합으로의 입국이 금지되었음

독일은 3월 16일 모든 교육기관의 점정 폐쇄를 명령하고, 3월 18일 여행 제안 명령 강화, 3월 22일 3인 이상 공공장소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바이에른, 자틀란트, 작센 3개주는 봉쇄정책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초기 강력한 이동제한 조치를 단행하여 확산을 막고자 하였음

의료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플랫폼 활용을 위하여 기존의 재난경보알림 Katwarn 앱과 NINA 앱, 감염자 추적용 코로나앱(CoronaApp)을 활용하였으며, 익명성 기반의 시스템을 적용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였음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이나 민간 협력에 있어서 연방공동위원회(Federal Joint Committee)를 구성, 연방수상 메르켈 총리 및 16개 연방 주지사가 국가 및 지방의 방역 정책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였음

- RKI(Robert Koch Institute, 로베르트코흐연구소, 연방전염병연구소에 해당)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결과와 바이러스 확산 및 방역에 관한 시뮬레

4) 독일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이희영 외(2020)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가독성을 위하여 별도의 내주 및 각주를 삼가함

이선 등을 지방정부에 제공하도록 하였음

- 입원환자의 지원체계 구축에 있어서 보험 급여는 중앙정부(Institute for the Hospital Remuneration System, InEK)에서 담당하고, 병상과 치료 재원의 조달은 지방정부에서 담당하여 협력 체계를 갖추
- ‘질병보호법’에 의거하여 국가비상사태 선언하고 별도의 입법 과정 없이 공공보건과 위생에 관련한 강력한 조치를 도입하였음
- 병원급여예산을 증액함과 동시에 응급 의료 지원금의 제공 등 예산과 재원 투입도 확대하였음
- 민간 제약회사와 의료산업체와 협력 강화를 통하여 검사 역량을 높이고, 마스크 생산을 위하여 주요 대기업들의 협력을 이끌어냈음

전반적인 중앙정부-지방정부의 협력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하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나, 그 역량의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

- RKI 등에서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데이터, 시뮬레이션 결과, 방역 관련 정보들이 지방정부의 방역 조치에 도움이 되었음
- 초기 바이에른주의 비상사태 선언 당시 녹색당이 한 때 비상사태 선언을 밀어붙인 연방정부의 정치적 조치라고 비난하였으나 메르켈 총리(자가격리) 등 주요 정치인들이 확진 및 자가격리되는 등 확산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메르켈 총리가 전면에 나서서 코로나19에 대응함으로써 정치적 충돌은 잦아 들었음
- 마스크 의무화의 경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다소 의견 충돌이 있었으나, 마스크 의무화를 우선 추진한 지방정부의 효과 분석과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다른 지방정부에 제공하여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마스크 의무화를 확대할 수 있었음

10월 말 하루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었으며, 11월 들어오면서 확진자가 하루 2만 명을 넘기기 시작하였으며, 확산세가 초기보다도 더 급격하여, 현재 독일의 방역체계 및 의료체계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

- 11월 발생 확진자의 75%는 그 감염경로를 알 수가 없음
-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방역에 실패하였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10월 27일 메르켈 총리는 연방정부 회의에서 정보보호(확진자, 접촉자 등 추적 불가)가 방역의 효과성을 너무나 떨어뜨려 방역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하였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함

이와 같은 방역 실패와 위기로 인하여 11월 2일 다시금 봉쇄령이 내려졌으며, 11월 27일 기준 확진자가 102만 명으로, 100만을 넘겼음.

3) 일본

일본의 코로나19 발생 현황은 2020년 11월 28일 현재 총 14만 3530명이 확진되었으며, 총 사망자 수는 2,109명임. 11월 들면서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으며, 11월 25일 2,514명을 기록하며 하루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하루 2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임⁵⁾

- 1월 15일 일본 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음. 첫 확진자는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남성이었음
- 첫 확진자 및 우한에 여행을 다녀온 40대 남성 1명과 여성 1명도 확진되었고, 위 3명에 의하여 전파된 감염환자가 1월 25일 기준 7명이었음

일본의 초기 대처의 미숙함을 전형적으로 들어낸 것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대규모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사태였음

- 요코하마항에 정박하려던 영국 국적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확진자가 탑승하여 선내 감염이 촉발됨
- 홍콩에 거주하던 80대 남성이 1월 20일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하여, 1월 25일 홍콩에 하선하게 되는데, 2월 1일 홍콩에서 확진 판정을 받음
-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객들의 하선 요청에도 일본 정부는 이를 불허하여 2월 2일부터 2월 19일까지 선내 격리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135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였음
-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객들이 2월 19일 하선한 이후, 자가격리 조치나, 이동제한 조치 등이 전혀 없었으며, 나아가 승객들의 이동에 있어서도 대중교통 제한이 없는 등 일본의 대응이 매우 부실하였음
-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여행지였던 베트남, 홍콩, 대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2월 1일 승객 2,679명이 오키나와를 관광하였음. 2월 14일 오키나와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관광객을 태웠던 택시 기사였음
-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총 확진자 712명, 사망자 12명이 발생하였음

하루 검사건수: 일본 초기 대응에 있어서의 가장 큰 실책이나 논란은 하루 코로나19 검사 건수였음

-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사태가 발생하여 일본 전역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2월 6일부터 2월 15일까지 일본 정부가 실시한 총 검사건수는 1만 2천 건에 불과하였음.
-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하루 2만 건 이상의 검사를 실시하였음
- 일본 정부는 37.5도의 발열이 4일 이상 지속된 경우에만 코로나19 진단을 받을 수

5) 일본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김숙현(2020)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가독성을 위하여 별도의 내주 및 각주를 삼가함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음

- 확진자 수를 의도적으로 통제하려고(낮추려고) 한 조치로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음

일본 정부의 대응: 일본 정부는 2월 13일 처음으로 코로나19 긴급대응 정책을 발표하였음(37.5도 이상 4일 발열 시 검사 포함)

- 2월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대책 기본방침을 발표하였음
- 2월 26일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경북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자(소위 신천지 발 확산), 대구, 청도 방문자에 대한 일본 내 입국을 불허하였으며, 3월 초부터 한국(5일), 중국(9일)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2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 후 입국을 허가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한국과 중국에 대한 비자효력을 정지시켰음
- 3월 10일 2번째 코로나19 감염 긴급대응책을 발표하였음

3월부터 집단감염(클러스터 감염)이 확산되자 3월 18일 긴급조치를 발표

- 3월 초 전국의 각지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장애인 시설이나 소규모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었음
- 3월 18일 긴급조치 발표 후 3월 26일 '코로나19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4월 1일 소위 '미즈가와(水際)' 대책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실시, 4월 3일 이후 외국인의 재입국을 불허하고, 일본 거주 외국인에 대해 재입국이 불허된 지역으로의 출국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음

4월 7일 아베 총리는 4월 8일부터 도쿄도와 인근 7개 도도부현에 긴급사태 선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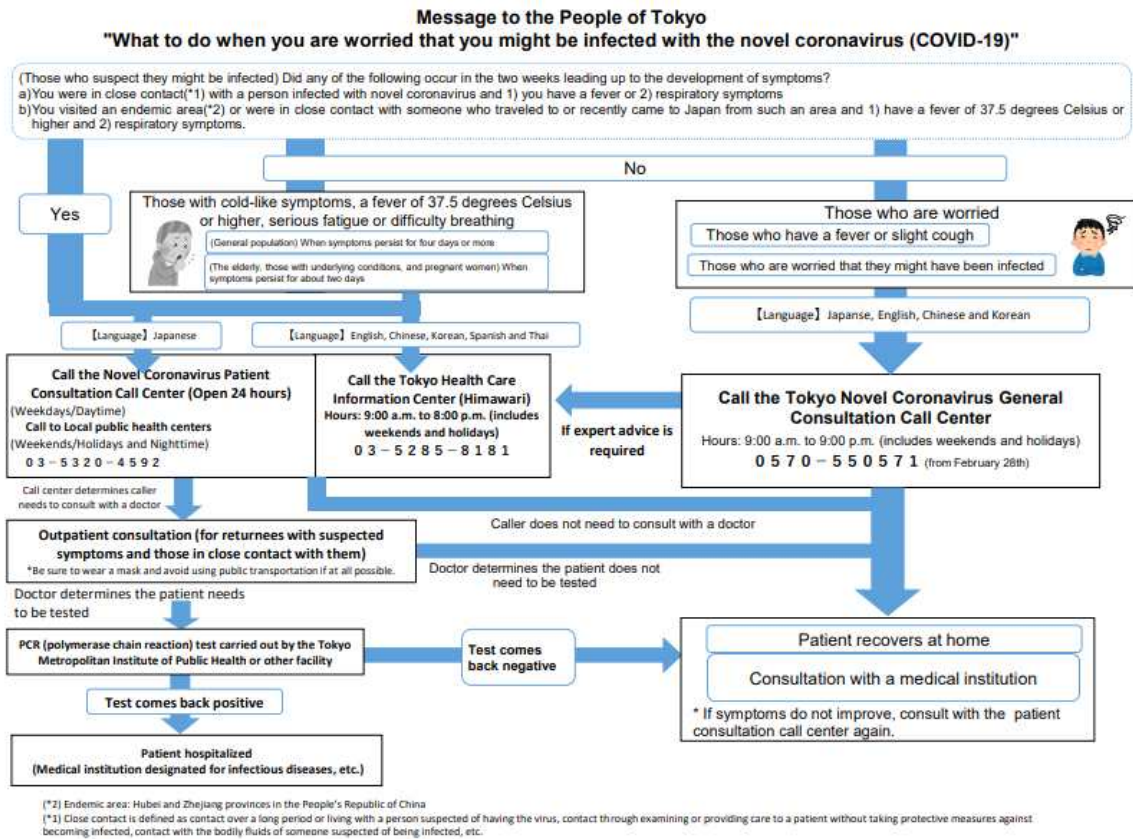
일본의 방역 실패는 7월 24일 개막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의 개최를 의식하여 1) 일본 내 확진자 수를 의도적으로 최대한 적게 보이도록 한 미즈가와 정책 실패,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실패, 3) 국민들에게 정확한 방역 정보와 감염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 실패로 정리할 수 있음

소극적인 검사 및 조기 확진자 파악 미비

- 일본 정부는 올림픽의 개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확진자를 찾기 위한 노력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음
- 코로나19 검사는 37.5도 이상의 고열이 4일 지속되어야 하였으며, 산소포화도가 93% 이하, 폐렴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하였음
- 아래의 <그림>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한 절차를 설명하는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소에 전화하여 상담 후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혹은 자비(3-12만 원 내외)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검사를 받는 것에 있을 위와 같이 까다롭고 복잡하게 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존재함

- 아베 총리는 2월 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간이검사키트를 개발하여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병원에서 PCR검사(통상의 확진 검사)를 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진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정확도가 떨어지는 간이검사키트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음. 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존재함
- 결과 2월 - 3월 사이의 검사건수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1/30,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1/15 - 1/20 정도 수준 밖에 되지 않았음
- 3월 24일 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이후 PCR 검사가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나, 초기에 확진자 파악을 통한 확산을 막기에는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있음

〈그림 III-1〉 일본의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한 절차 설명도



출처: https://tokyo.philembassy.net/docs/COVID-19_what_to_do.pdf

중앙정부-지방정부의 협력 부실

-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와 중앙정부와의 갈등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 지사, 스즈키 나옴이치(鈴木直道) 홋카이도 지사 등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의 느슨하고 책임감 없는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며, 중앙정부와 각을 세우며 독자 행보를 지속하고 있음

- 고이케 도고도지사는 4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중앙 정부의 긴급사태선언 및 후속 조치)이 확산세를 억누르지 못할 것으로 예측, 도 자체적으로 6개 식객 업장의 휴업을 요청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휴업에 따른 협력금 지급을 선언함
- 8월 2일 오키나와는 독자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하게 되는데,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미온적 대처를 하자 오키나와는 지방정부 차원의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식당 영업 제한, 외출 자제 조치 등을 취하게 됨
- 8월 3일 도쿄부와 오사카부는 독자적으로 식당영업 및 노래방, 주점 등에 대한 영업 제한을 실시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협화음은 2020년 말 현재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이와 같은 불협화음의 가장 큰 원인은 중앙정부의 역량 부족과 지도력 부재, 중앙-지방의 정책적 소통의 부재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일본 정부의 정보 공개 부실, 확진자 동선 미공개, 코로나19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정부 내, 정부 간(중앙-지방), 정부-민간 공유 부재, ICT를 활용하지 않는 경직성 등으로 효과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

코로나19 실패를 통하여 본 일본 정부의 부실한 대응은 지난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함께 다시금 일본이 선진국이자 재난에 강한 매뉴얼 국가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하며,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나아가 지도자와 정권의 역량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음. 한국적 관점에서 코로나19 사태에서 일본의 매뉴얼이나 정책 대응을 차용하거나 배울 것이 많지 않다는 의견이 존재함.

2. 도시정부의 초기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OECD의 정보 제공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전염병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각인시켰으며, 국제기구들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는 물론, 각 국가별, 각 지역별 코로나19의 영향과 이에 따른 권고를 내놓고 있음. 특히 OECD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정보와 데이터, 분석 보고서 및 정책 제안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경 없는 협력을 이끌어 내고 있음⁶⁾

코로나19 확산 초기(2월-4월) OECD는 협력적 코로나19 극복과 복원력을 갖춘 정책 대안 모색하기 위하여 경제, 재정, 기업, 국제협력, 거버넌스, 사회안전망, 헬스케어, 교육, 노동, 환경, 디지털화, 무역, 지역과 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책 대안 및 권고 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음

OECD는 이와 같은 코로나19 대응의 정책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시정부의 대응에 관하여서도 상세한 보고서를 통해 정책 권고를 하고 있음.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확산에 대응하여 OECD는 도시정부 정책 권고를 크게 6개 영역에 걸쳐 상세히 제시하고 있음. (해당 권고는 중단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권고에 해당하며, 장기적 관점에 관해서는 보고서의 업데이트 이후 추가적인 정책 방향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음)

- 6개 영역: 사회적 거리두기, 직장과 통근, 취약계층, 지방 공공서비스, 기업 및 상공인 지원, 소통, 인식제고, 디지털기기
- 우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정책 권고는 전염병 확산 초기 대응으로 확산과 전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정책 권고로 볼 수 있음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 OECD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할 경우 모임과 행사를 취소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음
- 공공시설 및 문화예술스포츠 시설에 대한 폐쇄, 학교의 폐쇄가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있음

6) <https://www.oecd.org/coronavirus/en/>

위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데이터, 분석 보고서, 정책 권고 등을 OECD가 제공하고 있으며, 여타 국제기구들의 정보제공이나 분석 보고서 출간, 정책 권고 등을 비교할 때, OECD의 정보의 질이 압도적으로 우수함. 특히 정책적 관점에서 제공되고 있는 Policy Response(<https://www.oecd.org/coronavirus/en/#policy-responses>)의 경우 그 분석 수준이 매우 높고, 나아가 각 국의 다양한 우수한 사례와 정책 대안을 분야별로 상세히 다루고 있어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책 연구 및 정책 개발에 있어서 주요한 정보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도시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필요한 장비와 기구들의 보급에 최대한 만전을 기하여, 공공 부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직장과 통근(workplace and commuting)

- 도시정부의 공직자부터 재택근무와 근무시간 유연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직장 근무 형태의 변화를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음
- 민간기업 역시도 재택근무와 근무시간 유연화를 시행할 수 있는 도시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전염병으로부터의 직장 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역 조치와 노동자들에 대한 방역 및 진단 프로세스의 신속한 적용이 요망됨
- 통근과 관련하여 대중교통 수단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대중교통 혼잡도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조정 정책 방안이 각 도시의 특성에 따라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 특히 출퇴근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운영 제한, 방역 강화, 대중교통 수단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과 같은 정책대안을 집행해야 함
- 근무시간 유연화를 통한 통근 시간 혼잡을 줄여야 하며, 재택근무의 활성화 역시 요망됨을 강조함

3. 도시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OECD의 정책권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확산될 경우 사회, 경제적 부정적 영향이 극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실제로도 코로나19는 사회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 관련된 도시정부의 정책이 요망됨

본 절에서는 OECD가 지난 7월에 발간한 정책 권고 보고서인 ‘Cities Policy Responses’ 를 중심으로 도시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권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⁷⁾

취약 계층(위험에 노출된 집단들, vulnerable groups)

-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확산될 경우 그 어려움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집단보다는 그렇지 못한 취약계층, 저임금 노동자 계층, 안전하지 못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즉 위험에 노출도가 높은 집단들에게 더 크게 다가옴
- 코로나19의 영향은 계층에 따라 비대칭적임(asymmetrical impacts)

7) <http://www.oecd.org/coronavirus/policy-responses/cities-policy-responses-fd1053ff/>

- 특히 도시에는 일자리를 찾아, 생계를 위하여 향도하여 도시로 온 취약계층이 상당히 많으며, 이들은 주거나 생활 여건, 일자리 등에서 전염병에 더욱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음
- 나아가 경제적으로 주거와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보다 높음
- 노인들의 경우도 전염병에 취약한 계층이라 할 수 있음.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⁸⁾

지방 공공서비스 전달(local service delivery)

- 안정된 공공서비스의 전달은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 시민의 안전과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이라 할 수 있음
-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은 공공부문의 재화와 서비스 공급과 전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줄 수 있음
- 즉 공공재의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공공조달 및 공공서비스 전달 과정의 계약 이행의 어려움이 상존함
- 공공서비스 중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기간산업(상하수도, 전기, 교통, 가스 등 포함)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도시정부 수준에서 이와 같은 공공서비스 전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타 도시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 및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 방역물자 관련하여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국가 전략 자원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시정부들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안정적 조달을 기해야 할 것임

기업 및 상공인 지원(support to business)

-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확산될 경우 생산과 소비 모두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등 규모에 관계없이 많은 기업과 상공인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도시정부는 관내 기업과 상공인들에 대한 생산 및 영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 재정을 활용한 지원 방법, 세제 지원을 통한 지원 방법, 기금을 활용한 지원 방법, 저리의 융자 등 금융지원을 통한 지원 방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 전통적인 기업 및 상공인 지원 방법을 각 도시정부의 특성과 각 국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지원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지방 정부 간 조정의 작업 내지는 협력의 과정이 요망됨

8) OECD 보고서에서는 이민자, 난민, 홈리스 등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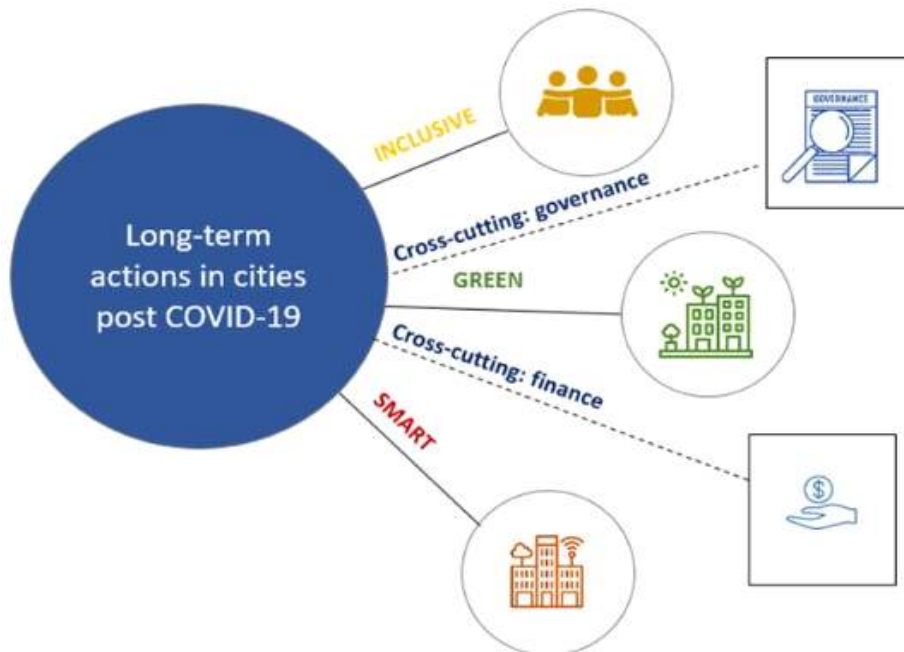
소통, 인식제고, 디지털기기(communication, awareness rising, digital tools)

- 위기 상황에 있어서 시민들과 정부와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며, 정부의 신뢰도 유지에 매우 중요함
- 특히 투명성(transparency)을 지키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핵심적인 시민들과 정부 사이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정부 신뢰는 높이는 데에 매우 중요함
- 특히 유래가 없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사태에 있어서 정보 제공과 이를 통한 인식의 제고는 초기 확산 방지는 물론, 방역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 고도로 발전되어 있는 다양한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정보 제공과 소통의 필요성이 매우 강조되지 않을 수 없음
- 정보 제공은 최대한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함

위와 같은 OECD의 중단기적 권고와 함께 도시정부의 정책 전략 방향성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음.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 전략 방향에 대하여 OECD는 5가지 방향에서의 권고를 강조하고 있음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중장기적 도시 정책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아래의 <그림 Ⅲ-2>와 같이 OECD는 정리하고 있음

<그림 Ⅲ-2> 장기적 관점에서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도시정부 정책 실행 방향



자료:

https://read.oecd-ilibrary.org/view/?ref=126_126769-yen45847kf&title=Coronavirus-COVID-19-Cities-Policy-Responses

OECD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도시정부의 정책(actions) 전략을 1) 포용적 회복(inclusive recovery), 2)친환경 회복(green recovery), 3)스마트 회복(smart recovery)로 권고하였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도시정부는 융합적 거버넌스와 재정정책 (cross-cutting governance 및 finance)를 제안하고 있음.

그리고 추가적인 회복 분야로 4) 관광/문화/창의산업의 회복(recovery strategies in the tourism, culture and creative industries), 5) 도시회복력을 위한 총괄적 전략(holistic strategies for urban resilience)를 제안하고 있음

포용적 회복은 이미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이러한 불평등을 보다 심화시키고 있음

- 일자리를 찾고 생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에 온 취약계층의 경우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으며, 생계의 어려움과 나아가 전염병이 감염될 수 있는 확률 역시도 더 높음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작동할 수 있도록 도시정부는 현행의 제도운영 방식에 대한 점검과 함께, 코로나19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상황을 분석하여 추가적인 사회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드려야 하며, 맞춤형 일자리 정책(customised employment)을 통한 노동시장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즉 의료사각 지대에 놓여 있을 수 있는 취약계층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여야 하고(전염병은 빈부의 차이, 의료접근성의 차이와 관계없이 전파됨), 특히 도시의 빈 건물, 재개발 지역, 이면 도로 주변의 낙후된 마을, 배후 시설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을 보다 신경 써야 할 것임
- 주택의 문제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취약계층과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 월세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이들이 주택에서 내몰리게 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약계층 자녀들의 교육의 질이 하락하고, 나아가 온라인 교육 여건의 불평등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서도 지원정책이 요망됨
- 경제활동의 측면에서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들에게 더 큰 악영향을 주고 있음
- 대면이 필수적인 업종은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중소기업과 영세한 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요망됨

친환경 회복(녹색회복, Green recovery)

- 코로나19는 환경파괴와 함께 등장하면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sustainable) 사회의 건설이 곧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이며, 나아가 친환경적 회복의 길이라고

OECD는 설명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의 대기가 깨끗해 진 것에 대해 전 지구적으로 환경과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였으며, 나아가 이동수단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억제와 새로운 과학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적 도시 이동 수단에 대한 고민을 깊이 있게 진행해야 할 계기를 마련하였음
- 코로나19로 에너지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친환경 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도시 정책에 관련되어서도 고민해야 할 것임
- 도시 재생과 지역 개발, 도시 계획에 있어서 향후 전염병과 같은 의료재난은 물론, 환경적 문제를 고려하여 정책이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도시의 밀집도와 형태 등을 코로나19 이전의 밀집도가 높은 난개발을 피해야 할 것임

스마트 회복(Smart recovery)

- 디지털화(digitalization)는 도시정부에 있어서 코로나19의 방역은 물론 위기 대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방역 관련된 정보의 제공, 위험 경고, 커뮤니케이션에 스마트 기기는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위해서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재택근무와 유연화 된 근무를 가능하게 함
- 도시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기존의 대면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공공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대중교통 수단 역시도 향후 발달된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개념의 교통수단 및 교통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코로나19의 대응에 있어서 데이터의 축적과 분석, 그리고 개방과 공유는 새로운 차원의 정책적 이슈였음. 따라서 데이터의 측정과 관리, 분석, 나아가 데이터 기반 정책의 추진은 스마트 도시정책의 핵심으로 부각시켜야 할 것임
-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공공재의 조달 역시 스마트 시스템 등을 활용한 새로운 프레임의 시각 전환이 필요함

관광/문화/창의 산업의 회복(Recovery in the tourism, culture and creative industries)

- 관광은 OECD국가 GDP의 4.4%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경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산업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80%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나아가 공연과 예술, 음악, 미술, 전시 등 문화/창의 산업 역시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당한 위축이 불가피함
- 그럼에도 관광, 문화/창의 산업에 대한 수요가 결코 줄어드는 것은 아님
- 즉 코로나19로 인하여 향유하지 못하는 것일 뿐, 코로나19가 극복될 경우에 그 수요

는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적 기간이 소요되는 동안의 지원이 필요함

도시 회복력을 위한 총괄적 전략(Holistic strategies for urban resilience): 좋은 도시 거버넌스(good governance) 및 민첩(agile)하고 유연한(flexible) 도시 거버넌스의 창조가 필요함

- 코로나19는 보다 지속가능한, 보다 형평성 있는, 보다 회복력 있는 도시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존재하였고, 문제가 되었던 불평등(inequality)과 취약계층(vulnerabilities)의 문제는 도시회복력을 위한 전략 및 정책에 있어서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앞선 포용적, 친환경적, 스마트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지렛대로 삼아 보다 성공적인 도시 정책을 수립해야 함
- 도시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책임성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해야 하며, 특히 공공과 민간이 협력을 이루어야 좋은 거버넌스로 거듭날 수 있음
- 따라서 거버넌스에 내재되어 있는 참여자들의 책임과 자원을 함께 협력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하며, 도시 수준을 넘어선 지방-중앙 수준, 나아가 글로벌 수준의 이슈들 역시도 협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
- 전 세계의 도시는 다양한 특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도시별로 맞춤형 전략(tailor strategies)의 필요성이 대두됨
- 시민참여(citizen engagement)를 활성화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스마트/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 앞서 스마트 회복에서 강조한 것과 같이 정보의 분석과 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임. 즉 투명성(transparency)과 책임성(responsibility)을 갖춘 열린 도시정부가 되어야 할 것임(open government).
- 재정(financial resources)은 포용적, 친환경적, 스마트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도시 재정을 정비하고 예산의 책정과 배분, 세제 정비, 민간 부분의 경제 상황 전반을 고루 살펴야 할 것임

OECD는 앞선 논의를 정리하여 코로나19 관련 핵심 영역을 5가지로 강조하고 있음: 포용적 회복(inclusive recovery), 회복력을 갖춘 의료(resilient healthcare), 사회적 도전(social challenge), 친환경 회복(green recovery), 글로벌 경제(global economy)

〈그림 Ⅲ-3〉 코로나19 대응 OECD의 핵심 영역(key areas of focus)

		
<p>INCLUSIVE RECOVERY</p> <p>The crisis has heightened social pressures and increased the inequalities that existed before COVID-19. Now is the time to intensify effort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and set in motion an inclusive and transformative recovery.</p>	<p>RESILIENT HEALTHCARE</p> <p>The pandemic has placed unprecedented pressure on health systems. Containing and mitigating the spread and infection rate of the virus are essential, as is boosting the resiliency of health systems.</p>	<p>SOCIAL CHALLENGES</p> <p>The COVID-19 pandemic is taking a heavy toll, reshaping all parts of our lives. Children and young people, low-income households, women, low-skilled workers, part-time or temporary workers, and the self-employed are especially vulnerable.</p>

	
<p>GREEN RECOVERY</p> <p>Cleaner air quality, healthier water, effective waste management, and enhanced biodiversity protection not only reduce the vulnerability of communities to pandemics and improve resilience, but have the potential to boost economic activity and reduce inequalities.</p>	<p>GLOBAL ECONOMY</p> <p>Extraordinary policies are needed to face the deepest economic recession in nearly a century, and walk the tightrope towards recovery, which will shape the economic and social prospects of the coming decade.</p>

자료:

<https://www.oecd.org/coronavirus/en/#focus-areas>

4. 한국 지방정부에의 함의

코로나19의 초기 대응과 관련하여 대만의 경우 중국과의 경색된 관계가 오히려 방역에 도움을 주었으며, 체계적인 방역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확산을 막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

일본의 경우 초기 대응의 미숙, 불투명한 정보 공개, 확진자 발생 및 증가를 의도적으로 통제하여 발생한 초기 방역의 실패, 복잡한 코로나19 검사 과정, 확진자에 대한 부실한 치료 및 관리는 일본이 재난에 강한 선진국으로써의 이미지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으며,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음

독일의 경우는 초기에 여타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방역에 성공하였으며, 유럽연합의 주요 국가로서 역할을 다하였으나, 2020년 하반기 급속도로 확진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시민들이 공감하는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점,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못한 점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일본과 독일의 사례에서 행정학적으로 문제시되는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 및 협력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는 점임. 독일의 경우 초기 불협화음을 봉합하여, 어느 정도 협력이 이루어졌으나, 2020년 하반기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발생 초기부터 2020년 12월 현재까지도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적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중앙-지방 협력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아도 무방하다 할 수 있음

특히 코로나19로 전 세계의 우수 도시정부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동안 서울 등 우리나라의 대도시 지방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모범 도시들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OECD, UN, UNDP, EU, World Bank 등 다양한 국제기구들의 보고서들에서는 서울과 대구 등 우리나라의 대도시 지방정부들이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사례로 소개하고 있음
- 앞서 OECD의 보고서에서 권고하는 있는 도시 정책에 있어서 서울의 스마트 회복, 친환경적 회복 사례는 수차례 강조되어 제시되고 있음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방정부 역할의 관점에서 OECD의 권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이 포용적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 가며, 포용적 회복과 함께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지방정부 역할의 핵심이 존재한다 할 수 있음

- 서울은 인구 1,000만 명의 도시이며, 경기도를 포함한 서울 생활권을 고려한다면 2,000만 명 이상이 서울시를 생활의 터전으로 하여 생활하고 있음
- 이러한 서울에서는 OECD 보고서에서 집중하고 있는 대상인 취약계층이 존재하며, 코

로나19로 인하여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중소기업과 소규모, 영세 중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는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 등 지방정부는 포용적 회복을 위한 정책적 청사진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개방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즉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경제적 위기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동시에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긴급재난지원금 사례와 같이 두 집단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도 입안될 수 있는 만큼 ‘균형감’ 있는 정책의 추진이 요망됨
- 다시 말해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정서적 공정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재정적 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과 세수 등을 면밀히 살펴 정책의 재원을 추계하고 마련해야 할 것임
- 중앙-지방정부, 지방-지방정부 관계에 있어서도 유기적 협력의 필요성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현재까지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며, 주요한 방역 조치 시행,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예: 경기도민의 서울 출퇴근 대중교통 지원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부분에 있어서 중앙-지방, 지방-지방 정부 간 협력은 매우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정책 영역별 협의체 구축과 나아가 이슈네트워크와 같은 정책 관계자 연결망을 구축하여 정책 이슈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IV.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체계 및 활동

1. 2015년 메르스 대응 사례

1)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본부 구성

코로나19 이전의 2015년 5월 20일 첫 환자 발생 이후 10월 말까지 진행되었던 메르스를 대처하기 위한 서울시의 방역지침과 대책에 대해 먼저 확인해보고자 함.

서울시는 5월 20일 보건기획관을 대책본부장으로 하는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음.

- 추가 감염자가 계속 확인되는 등 상태가 심각해지자 5월 29일 대책본부장을 행정1주 시장으로, 6월 4일에는 시장으로 격상하여 산하에 실무추진반을 설치해 전 실, 본, 국의 역량을 결집했음.

〈그림 IV-1〉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경과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경과

5월 20일	서울시 지역재난안전본부 설치(대책본부장: 보건기획관, 현 시민건강국장)
5월 29일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본부 대책본부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격상 자치구별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역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요청
6월 4일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본부 대책본부장을 시장으로 격상
7월 28일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본부 대책본부장을 시장에서 시민건강국장(구 보건기획관)으로 변경

출처 :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 백서(2015)

전체 서울시 차원의 협력체계 역시 구축하였음. 복지건강본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중앙대책본부와 협력을 총괄하고 환자관리와 의료지원을 지원했고, 행정 지원은 물론 시민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메르스 방역대책본부 운영을 뒷받침했음.

- 행정국은 자치구 상황을 총괄해 자치구와의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비상기획관은 서울경찰청, 수도방위사령부 등과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했음.
- 7월 3일 이후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자가 격리 대상자가 전원 해제되는 등 메르스 사태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자 7월 28일부터는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본부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대책본부장: 시민건강국장)로 전환했음.

〈그림 IV-2〉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본부 각 실·본부·국 구성 및 역할

각 실·본부·국 구성 및 역할

실·본부·국	역할
복지건강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대책본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의 협력 총괄 • 상황실장 및 추진반에 대한 지원 • 환자관리, 의료자원지원, 행정지원, 상담센터 운영
행정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와 협력·공조체계 구축 및 지원 • 반상회보 등 지자체 홍보 협조(예방수칙, 시민안심 등) • 전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
비상기획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경찰청·수도방위사령부 등과 공동 대응체계 구축
평생교육정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과 협력·공조체계 구축 • 시설격리 총괄 및 격리시설 운영
대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매체 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
시민소통기획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매체를 활용한 대시민 행동요령(시민안심) 등 홍보
감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르스 대응 추진실태 점검(자치구 포함) • 메르스 관련 실태조사 등 지원

출처 :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 백서(2015)

2) 서울시의 대응 활동

서울시는 콜센터 운영, 역학조사, 선별진료실 운영, 가택격리, 검체 검사, 환자이송 등의 각 분야별 방역에 전 방위적으로 대응하였음. 또한 메르스 방역대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음

시민들의 메르스 증상문의 및 의심 신고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20다산콜센터를 비상체제로 전환함

- 120다산콜센터는 메르스 의심자에 대한 신고와 접수창구 역할을 사용했으며 보건소의 메르스 검사 및 자가 격리를 지원함

〈그림 IV-3〉 120다산콜센터 비상체계



출처 :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 백서(2015)

2015년 6월 7일부터 시립병원 의사, 보건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 10개를 편성해 중앙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메르스 확진자에 대한 병원 밖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함

- 특히 메르스의 경우 접촉 5-7일 이후 관련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 확진환자의 동선을 시민에게 신속하게 알려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동선에 대한 정보 제공 이후 동선별 세부 접촉자를 확인하고 해당 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함

〈그림 IV-4〉 역학조사 및 조치



출처 :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 백서(2015)

역학조사를 언론에 공개할 때 확진자 동선 중 병원, 약국의 경우 공개의 실익이 크므로 전면공개를 원칙으로 하였음

- 역학조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자치구와 공유하도록 보건소에 통보했음.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서울시와 자치구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역학조사 진행절차별 언론공개 원칙을 정했음
- 확진경로가 통보사실 발표와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 종합발표는 서울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치구 차원의 별도 발표가 필요할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동시에 발표하기로 함

확진환자와 접촉한 적은 없으나 발열, 기침, 가래 등 호흡기질환으로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진료를 위해 25개 보건소와 24시간 운영되는 32개 응급 의료기관, 8개의 시립병원 등 총 656개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했음.

〈그림 IV-5〉 선별진료소 진료절차

선별진료소 진료절차



출처 :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 백서(2015)

〈그림 IV-6〉 역학조사 언론공개 절차

역학조사 언론공개 절차



출처 :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 백서(2015)

3)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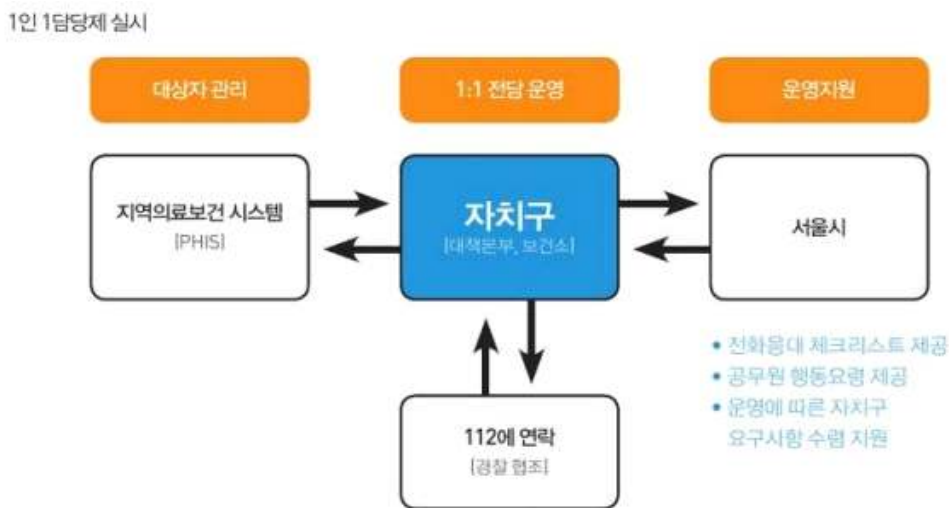
서울시는 메르스 방역을 위해 가택격리, 시설격리, 검체 검사 및 이송 등에 지침 대책을 설계하여 방역에 노력을 기했음

- 특히 접촉자 밀착관리를 위한 1인 1담당제를 실시함

자치구는 1인 1담당제를 전담 운영했으며, 서울시는 전화응대 체크리스트와 공무원 행동요령을 제공하여 일선 현장에서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치구 요구사항을 지원함

- 접촉자, 공무원, 경찰이 1대1 매칭을 이루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함
- 자가 격리 및 능동감시 대상자 전체에 대한 전화 모니터링 실시하고 발열, 기침 등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자가 즉시 방문 후 보건소에 연락해 검체를 채취하도록 함

〈그림 IV-7〉 1인 1담당제 실시



출처 :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 백서(2015)

서울시는 메르스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사립병원 내 음압격리병동을 확보함.

- 서울시가 격리병상 확보 및 배정을 총괄하고, 자치구는 관할구역 내 메르스 확진자 및 양성자에 대한 병상요청 및 환자 이송을 담당함
-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병원이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 격리병상을 요청해 이를 전달받은 서울시가 격리병상을 배정하여 통보하고 자치구는 환자 이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 자택격리 중인 환자의 양성 또는 확진 판정 시 우선 격리병상을 배정하도록 함

〈그림 IV-8〉 서울시 자치구(보건소) 환자 이송



출처 :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 백서(2015)

메르스 유전자 검사는 검체(가래, 기관지, 세척액 등) 채취 후 수송해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원인불명 폐렴으로 전문의, 병원장 및 보건소장의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메르스 대응 지침에 따른 의심 환자인 경우, 마지막으로 확진자 병원의 접촉자 중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실시함

의심환자 이송을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메르스 전담 119 구급대를 운영하였음

- 이는 각 소방서별로 지정되어 총 23대를 운영했음. 민간이송업체도 메르스 검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메르스 의심환자 이송에 참여하였음

다중이용시설 방역 역시 강화하였음. 지하도상가 등 다중시설과 공중화장실 그리고 지하철 역사 특별 방역이 이루어졌음

- 특히 역사의 경우 1단계 알코올 소독, 2단계 분수 소독, 3단계 안개분무 소독 순으로 실시함

4) 서울시와 민간의 협력

서울시는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공공-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했음. 무엇보다 자치구(보건소), 시립병원 등과 공공의료 방역체계를 구축해 메르스 확산에 공동으로 대응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력 및 공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메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지자체의 자체적인 확진 권한을 인정하는 한편,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역학 조사를 실시했음
- 2015년 6월 7일 보건복지부와 4개 지자체가 함께한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중앙 지자체 연석회의'에서 정부와 서울시는 상호 공조를 약속하고 협력관을 파견하기로 함
-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체적인 확진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장 메르스 대책 합동 브리핑'을 통해 메르스 환자 발생, 경유 병원 명단을 공개함과 동시에 지자체에도 확진 권한을 부여하기로 발표함

서울시는 또한 자치구(보건소)와 합동대응을 진행하였음.

- 시와 구의 긴밀한 합동 대응을 위해 서울시-자치구 보건소장 회의, 시장-구청장 연석 회의를 개최하여 메르스 대응 관련 서울시와 자치구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보다 신속한 대응과 확산 방지를 위한 시, 자치구간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함
-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메르스 환자 및 접촉자 신고, 접수 체계를 구축하고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는 '서울시 메르스 리턴콜센터'에서 대응요령을 안내한 후 이송 등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과 연계했음
- 자치구는 유증상자에 대해 보건요원이 직접 방문해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하고 전담

의료기관 이송여부를 판단해 필요시 이송하는 업무를 맡음

- 자치구의 방역대책본부는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 주재로 구성했고 관내 의료기관 및 소방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했음

서울시 유관기관, 재난관리기관 및 시립병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

- 서울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자가격리자에 대해 ‘1인 1담당제’를 시행해 관리함. 특히 경찰 1.670명을 2015년 6월 9일부터 투입되었으며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로 위치추적 등을 통해 자가 격리자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음
- 서울시는 시립병원관계자, 거점병원 관계자, 의료분야 직능단체 등과 회의를 통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섬. 선별진료소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격리병상 가용분을 파악하고 병상 확보대책, 후송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협조함

5) 메르스 이후의 감염병 대응체제의 변화

2015년 메르스 대응은 숭한 문제점을 야기함으로써 감염병 대응에 대한 법·제도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계기가 됐음

메르스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는 i)사전 예방적 감염병 관리의 부재 ii)컨트롤 타워의 부재 iii)정보의 투명성 및 정확성 부재 iv)병원 내 감염과 의료진 감염 v)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의 부재 등을 꼽을 수 있음(윤익준, 2018)

메르스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이러한 실패 경험은 이후 관련 법·제도와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음

- 2003년 사스(SARS)를 겪으면서 각종 질병에 대한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설치됨
- 2009년 신종플루 이후에는 기존의 감염병 관리 법제의 문제점이 드러남으로써 종전의 <전염병예방법>과 <기생충질환예방법>을 통합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제정함
- 그러나 2015년 메르스 대응실패 이후 <감염병 예방법>의 허점이 드러나자 관련법을 전면 개정함. 주요 내용은 i)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보 공유 및 상호협력 ii)확진자 관련 정보 공개 iii)역학조사관의 역할 강화 등임
- 이어 2018년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서는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 상황실의 설치운영, 감염병 접촉자 격리시설의 법적 근거 등이 마련됨 (정태중, 2020)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 및 활동

1) 중앙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체계

현재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장 그리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중앙정부가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상향('20.2.23)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조직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정점으로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 감염병 대응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방역 컨트롤타워인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의 방역업무를 지원함
- 2차장은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감염병 전담병원과 병상을 확보하고, 수용범위를 넘어서면 중앙에서 병상, 인력, 물자 등의 자원을 지원하고 있음

〈그림 IV-9〉 코로나19 대응체계



자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http://ncov.mohw.go.kr>)

2) 중앙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활동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관리, 역학조사 및 접촉자 격리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정부는 2020년 2월 4일부터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홍콩·마카오(2월12일), 일본(3월9일), 이탈리아·이란(3월12일), 유럽 주요 5개국(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3월 15일), 유럽 전역(3월 16일), 전 세계 모든 입국자(3월 19일)로 적용지역을 확대함
- 3월 19일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체온을 측정하고, 특별검역신고서와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야 함. 특별입국대상자는 한국 내 연락처 및 거주지가 확인되어야 입국이 가능하며, 체류 중 발열 등 감염가능성 확인을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여야 함. 모든 입국자는 대상자별로 해당 앱을 설치 후 입국 당일부터 14일 간 매일 1회 본인의 증상을 확인하여 증상 발현 여부를 '앱'에 입력하여야 하며 입국자 명단은 각 시·도에 제공되어 각 지자체에서 감시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

코로나19 환자 급증 및 국내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4월 1일(수) 0시부터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일 다음날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12:00까지 격리생활을 해야 함

- 해외 발 입국자 중 검역단계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양성 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됨
- 검사결과 음성 시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14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14일,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를 하게 됨
- 무증상 입국자 중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14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를 하고 3일 이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 무증상 입국자 중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시설격리(14일,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를 하고, 인천공항 입국자의 경우 09:00~19:00에는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19:00~09:00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 채취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함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환자들의 진단검사 접근성을 높이고, 대규모의 빠른 진단검사를 통해 환자를 찾아내고 있음

- 선별진료소는 기침이나 발열 등 감염증 의심증상자가 의료기관 출입 전 별도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임
- 2020년 4월 8일 기준 638개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를 설치 및 운영 중임. 이 중 95%에 해당하는 606개소에서 직접 검체 채취를 진행하고 있음
- 환자 발생 시 중앙·지자체는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을 추적하고 접촉자를 격리하고 있음. 역학조사 시 환자 인터뷰를 통해 동선 등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의료진 및 가족 인터뷰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파악된 정보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다 객관적인 정보(의무기록, 핸드폰 위치정보, CCTV, 신용카드 기록 등)를 수집 및 확인하고 있음

-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된 접촉자는 보건교육, 증상모니터링과 함께 자가격리 조치를 받게 되며,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확진자의 동선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중임
- 역학조사를 통해 환자의 동선과 감염경로를 중심으로 확인된 가족, 동거인 등 접촉자들은 확진환자 최종접촉일 다음 날부터 최대 잠복기(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며,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받게 됨. 자가격리자는 1:1 전담 관리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철저히 관리함. 자가격리자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14일간 출국 금지되며,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을 부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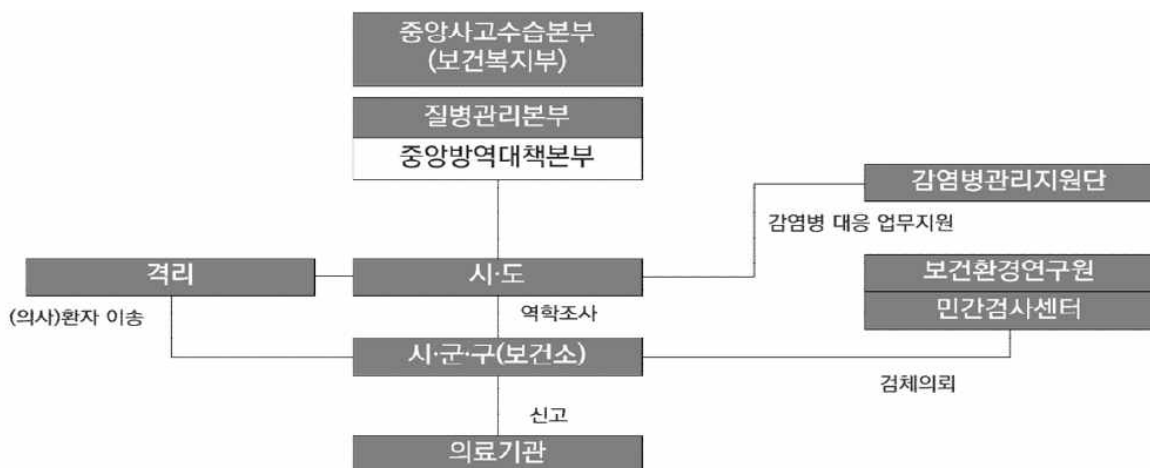
3)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체계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관리와 관련해 지방정부에게 부여된 권한과 역할은 다음과 같음

-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감염병 발생 시 대응 및 추가적 확산방지, 감염병 사태 지속에 따른 개인과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 감염병 환자에 대한 생활지원 등 기타 지원조치 등

감염병 대응 ‘심각’ 단계에서 지방정부는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다음의 〈그림 IV-10〉과 같은 대응체계를 구축함

〈그림 IV-10〉 지방정부 수준에서 코로나19 대응체계



자료 : 박진아·윤소은(2020)

위의 〈그림 IV-10〉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전국 지방정부의 경우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 발생지역 지방정부의 경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중앙-지자체 실무협의체 운영 협조
- 환자관리반 운영
- 지역환자 감시체계 강화, 지역 방역 인프라 가동
- 지역 역학조사, 현장방역조치, 환자 이송, 접촉자 파악 지원, 환자 및 접촉자 관리, 격리해제 등
-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 지역 주민 대상 교육·홍보 등 소통 강화

특히 서울시는 2020년 5월, 중앙정부와 별개로 서울시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형 표준방역모델’을 발표함.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앙정부의 감염병 대응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돼 있지만,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이를 7단계로 세분화해 좀 더 선제적으로 상황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 차원의 감염병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연구센터와 역학조사실의 신설을 추진함
- 이러한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체계 강화 계획은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서울시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대응함으로써 방역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4)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 활동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 활동은 크게 추적(trace), 검사(testing), 준비(preparation), 캠페인(campaign) 등으로 나눌 수 있음 (손창우, 2020)

첫째, 추적과 관련해 서울시는 확진자의 명단과 동선을 파악하고, 이를 접촉자와 대중들에게 공개함

- 확진자 관련 정보 수집 과정에서는 역학조사관,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관할 보건소 등이 협업을 진행함
- 또한 서울시 홈페이지에 매일 관련 정보를 공개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함

둘째, 검사와 관련해 서울시는 100여 개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쉽게 검사를 받도록 함

- 또한 해외입국자, 집단 감염지의 확진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검사를 제공해 검사의 범위를 넓힘
- 이 과정에서 드라이빙 스루와 같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검사의 범위

를 확대함

- 특히 구로콜센터와 같은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집단감염 신속대응반을 운영해 능동적으로 환자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확대함

셋째, 준비와 관련해 서울시는 집단감염 신속대응반,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생활치료센터 등을 설치해 혹시 있을지 모를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함

- 은평성모병원, 구로콜센터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집단감염 신속대응반 운영
- 시립병원인 서남병원과 서울의료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413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만약에 있을지 모를 메디컬 써지(medical surge)에 대비함
- 수도권 최초로 코로나19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설치

마지막으로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개인방역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광범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을 실시함

- 2020년 3월, 중앙정부보다 앞서 ‘잠시 멈춤’이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시함
-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 개인 방역 수칙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냄

V. 서울시의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본 연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나아갈 바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미래예측과 해외사례 등을 통해 일반적인 트렌드를 예측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결국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은 결국 그곳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엘리트들이기 때문에 서울시의원들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전망하고, 어떤 정책지향을 갖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함

설문조사의 설계와 응답자의 구체적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설문조사 방법 및 설문응답자 개요

1) 설문조사 방법

연구진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정책 방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지를 구성함

- 설문지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대한 평가’,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변화 전망’, ‘코로나19 이후 정책방향’ 등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눠 구성함
- 이후 해당 설문지를 이동현 의원실과 사무처와 협의하면서 최종 설문지를 확정함

연구진들은 분석의 포괄성을 위해 서울시의원 전원에 대한 설문조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10대 의원, 109명 전원에게 설문지를 배포
- 설문지 배포 시점은 서울시 사무 감사가 시작되는 11월 초였음. 이때를 선택한 것은 평상시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빠지만, 사무 감사 기간에는 해당 일정에 전원 참석하기 때문에 설문지 배포를 위한 최적기라고 판단함

설문지 회수는 11월 말에 이뤄짐. 그러나 이때까지 설문 작성을 완료하지 않은 서울시의원들이 적지 않아 최종 회수된 설문지는 총 50부임

- 단순 회수율로 따지면, 전체 의원 109명의 절반가량이지만, 이 정도의 수량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회수를 시도함
- 그러나 연구의 마감일 등 일정이 촉박해 일단 수거된 설문지 50부만을 대상으로 예비 분석을 함

2) 설문응답자 개요

회수된 설문지가 50부에 불과하고, 그나마 응답자의 개별 정보는 공란(missing data)으로 남겨진 경우가 많아 응답자 개요를 정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그나마 비교적 빈칸이 적어 분석의 의미가 있는 자료는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임

- 응답자의 이념성향을 가장 진보적인 경우를 0, 가장 보수적인 경우를 10으로 가정하고, 자신의 주관적 정치이념을 체크하도록 한 결과, 0~3까지의 진보성향이 16명, 4~6까지의 중도성향이 26명, 7~10까지의 보수성향이 8명이었음
- 이들 50명의 평균 점수는 4.50으로 전체적인 주관적 이념성향은 중도 성향인 것으로 판단됨. 보수적 성향(6점~10점) 16명(32%)으로 진보적 성향의 서울시의원이 가장 많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V-1〉 응답자의 주관적 정치성향

응답		N(%)	
진보 성향	1	0(0.0)	
	2	11(22.0)	
	3	5(10.0)	
↑	4	8(16.0)	
	중도	5	10(20.0)
	6	8(16.0)	
	7	6(12.0)	
↓	8	2(4.0)	
	9	0(0.0)	
	보수 성향	10	0(0.0)
전체		50(100)	

2. 코로나19에 대한 서울시 대응 평가

1) 서울시의 대응에 대한 평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V-2>와 같음. ‘매우 잘하였다’, ‘어느 정도 잘했다’라고 응답 수가 각각 8명(16%), 24명(48%)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전체의 64%에 해당함

- 부정적인 인식은 3명(6%)에 불과해 다수의 서울시의원이 코로나19 사태에 서울시가 대응을 잘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V-2> 코로나19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 평가

응답	N(%)	평균	표준편차
매우 잘했다	8(16.0)	3.68	0.957
어느 정도 잘했다	24(48.0)		
보통이다	15(30.0)		
별로 잘하지 못했다	0(0.0)		
매우 잘하지 못했다	3(6.0)		
전체	50(100.0)		

서울시의 대응을 ‘의료적 대응’과 ‘경제적 대응’으로 구분해 질문함

첫째, 서울시의 의료적 대응에 대한 인식은 <표 V-3>에 제시함

- 긍정적으로 응답한 서울시의원은 36명(72%)으로, 부정적으로 답한 서울시의원 2명(4%)에 비해 의료적 대응 정도는 매우 만족스러운 편으로 나타났음

<표 V-3> 서울시의 의료적 대응 평가

응답	N(%)	평균	표준편차
매우 만족스럽다	6(12.0)	3.8	0.700
다소 만족스럽다	30(60.0)		
보통이다	12(24.0)		
다소 불만족스럽다	2(4.0)		
매우 불만족스럽다	0(0.0)		
전체	50(100.0)		

둘째, 서울시의 경제적 대응에 대한 서울시의원들의 응답 결과는 <표 V-4>과 같음. 경제적 대응 정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21명(42%)으로 부정적인 답변 11명(22%)보다 높으나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서울시의원이 18명(36%)으로 경제적 대응 정도는 다른 대응 정도보다 낮음을 확인 할 수 있음

〈표 V-4〉 서울시의 경제적 대응 평가

응답	N(%)	평균	표준편차
매우 만족스럽다	3(6.0)		
다소 만족스럽다	18(36.0)		
보통이다	18(36.0)	3.26	0.876
다소 불만족스럽다	11(22.0)		
매우 불만족스럽다	0(0.0)		
전체	50(100.0)		

전체적으로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의료적 대응을 경제적 대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을 알 수 있음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서울시의원의 평가를 측정함 (〈표 V-5〉 참조)

- 긍정적으로 답한 서울시의원이 40명(80%)으로, 부정적으로 답한 서울시의원이 10명(20%)인 것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매우 높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평가 정도는 매우 긍정적임을 알 수 있음

〈표 V-5〉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평가

응답	N(%)
매우 잘한 일이다	14(28.0)
비교적 잘한 일이다	26(52.0)
비교적 잘못된 일이다	4(8.0)
매우 잘못된 일이다	6(12.0)
전체	50(100.0)

다음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회복을 위해 예산이 투입된다면, 어느 분야의 효과가 가장 큰 것인가 질문한 결과(〈표 V-6〉 참조), 가장 응답률이 높은 분야는 소상공인 관련 지원(긴급경영지원금, 대출연장 등) 30명(60%)으로 절반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두 번째로는 교육·육아 관련 지원(돌봄 지원, 온라인 교육 관련 지원 등)이 14명(28%)이 응답하였음

- 그밖에 취업·구직 관련 지원(직업훈련비 지원,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기대효과가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V-6〉 예산 투입이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

응답	N(%)
소상공인 관련 지원 (긴급경영지원금, 대출연장 등)	30(60.0)
고용유지 관련 지원 (휴직자 고용유지 지원, 유급휴가 지원 등)	6(12.0)
취업·구직 관련 지원 (직업훈련비 지원,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0(0.0)
교육·육아 관련 지원 (돌봄 지원, 온라인 교육 관련 지원 등)	14(28.0)

서울시가 제공하는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 서울시의원들은 ‘보통이다’가 21명(42.0%)으로 가장 높지만, 긍정적인 응답을 한 서울시의원이 22명(44%)에 달함

- 반면 부정적인 응답을 한 서울시의원은 7명(14%)이었음

〈표 V-7〉 서울시 제공 정보에 대한 평가

응답	N(%)
매우 도움이 된다	4(8.0)
약간 도움이 된다	18(36.0)
보통이다	21(42.0)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5(10.0)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4.0)
전체	50(100.0)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서울시의 대응을 17개 분야로 나눠 질문함

- 세부 항목에 대한 선정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이슈가 된 분야에서 선정하였음
- 측정방식은 각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했으며, 높은 점수일수록 높은 평가를 의미함

〈표 V-8〉 세부 항목별 서울시 대응 평가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정보의 투명성	50	3.66	0.772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	50	3.6	0.728
가짜뉴스 팩트체크	50	3.08	0.695
마스크 공급	50	3.14	0.833
의료치료(격리 수용, 치료 등)	50	3.68	0.819
출입국 관리(해외에서 온 입국자 관리 등)	50	3.58	0.992
주요 관광사업 통제	50	3.58	0.835
의료진 등 현장인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	50	3.52	0.614
사회적 분위기 안정	50	3.52	0.544
의약품 관련 물품에 대한 수급관리(마스크 제외)	50	3.46	0.646
마스크 등 관련 용품의 가격인상에 대한 통제	50	3.24	0.916
경제적 지원(소상공인 등)	50	3.36	0.898
이동 제한(학교 개강 연기 등)	50	3.44	0.907
생활방역 캠페인	50	3.58	0.992
시의회와의 협력	49	3.14	0.791
중앙정부와의 협력	49	3.45	0.867
경기도와의 협력	49	2.94	0.659
지자체와의 협력	41	3.24	0.69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직원 교육과 훈련	48	3.06	0.755

〈그림 V-1〉 세부 항목별 서울시 대응 평가



위의 <표 V-8>와 <그림 V-1>을 보면, 서울시의 대응과 관련한 각 분야의 평균 점수는 3.38점임

이러한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정보의 투명성,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 의료치료, 출입국 관리, 주요 관광사업 통제, 의료진 등 현장인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 사회적 분위기 안정, 의약품 관련 수급관리, 이동제한, 생활방역 캠페인, 중앙정부와의 협력 등 10개 분야임

반면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가짜뉴스 체크, 마스크공급, 마스크 등 관련 용품 가격인상 통제, 시의회와의 협력, 경기도와의 협력, 자자체와의 협력, 직원 교육과 훈련 등 7개 분야임

즉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의 대응 가운데 가짜뉴스 체크, 마스크 수급 관리 및 가격 통제, 서울시의회 및 다른 지방정부와의 협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함을 알 수 있음

이번에는 서울시 외에 전체 국민들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평가를 측정함

- 전체 국민들의 코로나19 대응을 ①국민들의 위생 관리 ②시민사회의 성숙 정도 ③사회적 신뢰 ④경제 회복 전망 등으로 나누고, 각각을 5점 척도로 측정함
- 분석 결과, ‘우리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위생관리를 잘한다. 와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이 성숙했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가 3.08로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 “우리 사회 시민들은 더 신뢰하게 되었다”에 대한 동의가 3.0, “우리사회는 빠른 시간 안에 경기회복 등 위기를 잘 극복할 것이다”에 대한 동의가 2.95였음
- 반면 “처음 본 사람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는 2.28로 가장 낮았음
- 이를 통해 서울시의원들은 코로나19 대응 과정 중 시민들의 개인적 위생관리, 높아진 시민의식 등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앙정부, 서울시, 서울시의회, 지자체의 대응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결과, 서울시가 가장 높은 점수(82점)을 받음

- 그 다음으로는 중앙정부(80.8점), 지자체(79.2점) 순서로 높은 점수를 받음.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응답 항목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74.8점)를 받음
- 이는 서울시의원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대응은 다른 곳에 비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2) 서울시의회 사무처 평가

앞서 언급했듯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서울시의회는 중앙정부, 서울시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음.

-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분권적인 입법부가 일사불란한 행정부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가용한 수단도 적기 때문일 것임
- 그 외에도 의회의 대응에 대한 낮은 평가는 실질적으로 의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처의 역량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있을 것임
-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서울시의원들은 의회사무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분석함

서울시의회 사무처의 일처리에 대한 평가를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7점 척도로 측정함

- 평균값이 클수록 해당 문항에 대한 동의의 강도가 강함을 의미함

분석 결과, “주어진 시간 안에 일을 효과적으로 완수한다.”가 가장 높은 평균 3.06을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2.94,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한다.” 2.86 등이었음

- 그러나 위의 3가지 문항 모두 7점 척도의 중간값(3.5)보다 평균값이 낮아 서울시의원들은 사무처의 일처리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V-9〉 서울시의회 사무처에 대한 평가

서울시의회 사무처 업무 평가		N	평균	표준편차
구분				
사무처는 주어진 시간 안에 일을 효과적으로 완수한다		49	3.06	0.747
사무처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한다		49	2.86	0.866
사무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49	2.94	0.944

3) 코로나19로 나타난 변화에 대한 평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방식의 업무와 교육방식이 확산됨. 이러한 변화를 서울시의원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문한 결과, 이전 생활과 비교하여 효율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이 11명(26.2%), 비효율적이라는 응답이 19명(45.3%)으로 코로나19 이후 비효율적으로 변화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높았음

〈표 V-10〉 비대면 업무, 교육에 대한 평가

응답	N(%)
매우 효율적이다	1(2.4)
약간 효율적이다	10(23.8)
별 차이 없다	12(28.6)
다소 비효율적이다	18(42.9)
매우 비효율적이다	1(2.4)
전체	42(100)

생활방역과 관련한 의견으로는 ‘이전에 실시한 사회적(물리적) 거리 두기 수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항목의 응답률이 31명(67.4%)으로 가장 높아 서울시의원들은 현재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지금과 같은 생활방역으로 코로나19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응답이 14명(30.4%)으로 더 엄격하고 강화된 조치보다는 지금과 같은 생활방역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의견 공감 정도가 높게 나타남

〈표 V-11〉 현재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평가

응답	N(%)
지금과 같은 생활방역으로 코로나19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	14(30.4)
이전에 실시한 사회적(물리적) 거리 두기 수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31(67.4)
이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보다 더 엄격하고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	1(2.2)
전체	46(100)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사회에서 특정 집단, 예를 들어 중국, 신천지, 성소수자 등과 관련하여 혐오 현상에 대한 생각의 정도의 응답 결과는 〈표 V-12〉와 같음

- 우리사회에서는 코로나19 발생 후 바이러스가 발생한 중국과 대거 집단감염이 발생한 특정 집단에 대해 수많은 집중이 되면서 이슈화되었는데, 응답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므로 걱정된다.’는 서울시의원의 의견이 27명(57.4%)으로 걱정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더 많은 응답 결과가 나타남

〈표 V-12〉 코로나19 사태 이후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응답	N(%)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므로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20(42.6)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므로 걱정된다	27(57.4)
전체	47(100)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사회의 각 제도에 대한 신뢰 정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의 역량, 한국의 의료체계, 미디어,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신뢰 정도의 변화를 측정함

- ‘이전보다 매우 신뢰하게 됐다’, ‘이전보다 약간 신뢰하게 됐다’는 답변은 신뢰 증가로, ‘이전보다 신뢰가 약간 낮아졌다’, ‘이전보다 신뢰가 매우 낮아졌다’는 신뢰 하락으로 정의함
- 이에 따라 신뢰가 증가한 제도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78%로 가장 높은 신뢰도 증가

- 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 62%, 서울시의 역량 55% 등 순이었음
- 반면 미디어의 신뢰도는 변함이 없다는 응답이 58%로 가장 많았고, 신뢰 하락이 24%로 신뢰 상승(18%)보다 높았음
 - 전체적으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서울시의원들은 한국의 의료체계, 중앙정부, 서울시 등에 대한 신뢰가 예전보다 상승한 반면, 미디어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거나, 다소 신뢰가 낮아진 것으로 추정됨

〈표 V-13〉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뢰 수준의 변화

구분	이전보다 매우 신뢰하게 되었다	이전보다 약간 신뢰하게 되었다	이전과 별 차이 없다	이전보다 신뢰가 약간 낮아졌다	이전보다 신뢰가 매우 낮아졌다	평균	표준 편차
서울시의 역량 전체 (49)	2(4.1)	25(51.0)	20(40.8)	2(4.1)	0(0.0)	3.55	0.647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전체 (50)	13(26.0)	26(52.0)	11(22.0)	0(0.0)	0(0.0)	4.04	0.699
TV, 신문 등 미디어 전체 (50)	1(2.0)	8(16.0)	29(58.0)	12(24.0)	0(0.0)	2.96	0.699
대한민국 정부 전체 (50)	3(6.0)	28(56.0)	10(20.0)	5(10.0)	4(8.0)	3.42	1.031

3.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변화 전망

1) 코로나19 이후 변화 방향에 대한 전망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상생활이 변할 것이라는 항목에 47명(97.9%)이 응답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아주 많이 변할 것이다’ 항목에 22명(45.8%)이 응답하였음

- 이처럼 서울시의원 대부분은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일상의 삶이 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음

〈표 V-14〉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생활의 변화

응답	N(%)
아주 많이 변할 것이다	22(45.8)
약간 변할 것이다	25(52.1)
별로 안 변할 것이다	1(2.1)
전혀 안 변할 것이다	0(0.0)
전체	48(100)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서울시의원 48명 중 42명(87.5)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응답했음. 즉 대부분의 서울시의원들이 향후 경제전망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음

〈표 V-15〉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전망

응답	N(%)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6(12.5)
약간 어려워질 것이다	36(75.0)
별로 어려워지지 않을 것이다	4(8.3)
전혀 어려워지지 않을 것이다	2(4.2)
전체	48(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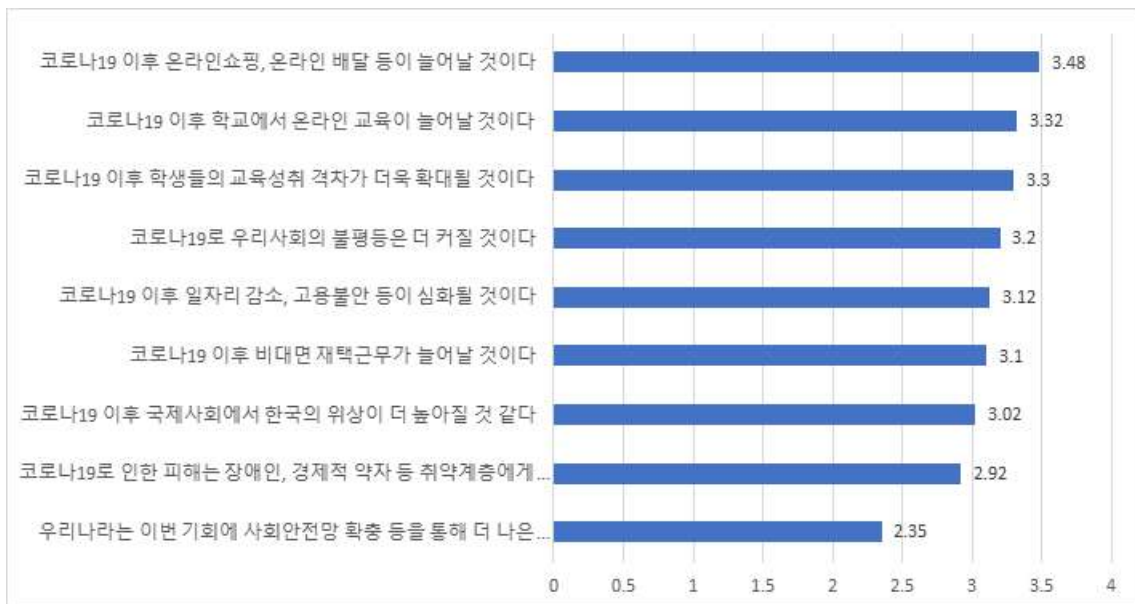
이번에는 복지, 고용, 노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영역별로 9가지 문항을 만든 뒤 각각에 대한 동의 정도를 측정함

- 척도는 5점 만점이며, 점수가 클수록 동의 정도가 강함을 의미함

〈표 V-16〉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장애인, 경제적 약자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될 것이다	50	2.92	0.804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 등이 심화될 것이다	50	3.12	0.435
코로나19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 커질 것이다	50	3.2	0.495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재택근무가 늘어날 것이다	50	3.1	0.580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쇼핑, 온라인 배달 등이 늘어날 것이다	50	3.48	0.505
코로나19 이후 학교에서 온라인 교육이 늘어날 것이다	50	3.32	0.471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교육성취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50	3.3	0.614
우리나라는 이번 기회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더 나은 사회로 갈 것이다	48	2.35	0.758
코로나19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 같다	48	3.02	0.812

〈그림 V-2〉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



- 위의 〈표 V-16〉와 〈그림 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쇼핑, 온라인 배달이 늘어날 것”이라는데 동의점수가 3.48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학교에서 온라인 교육이 늘어날 것” 3.32, “학생들의 교육 성취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 3.30, “우리사회의 불평등이 더욱 커질 것” 3.20,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 등이 심화될 것” 3.12 등 순이었음
-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격차 확대,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가 컸음. 반면 “이번 기회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는 가장 낮은 2.35를 기록해 서울시의원들은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를 다소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울시와 관련된 변화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분석함

-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했고, 점수가 클수록 해당 문항에 대한 동의의 강도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V-17〉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울시의 변화 전망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코로나19 이후 대중교통 이용이 감소할 것이다	49	1.86	0.540
코로나19 이후 공유경제 관련 정책이나 사업이 축소될 것이다	50	2.52	0.657
코로나19 이후 공공기관은 비대면 시스템을 통한 공공서비스를 늘릴 것이다	50	3.12	0.659
코로나 이후 서울시의 지역간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다	49	2.8	0.676
코로나19 이후 서울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50	2.44	0.501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의 경우 비대면 공공서비스가 늘어날 것”이라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3.1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울시 지역간 격차가 커질 것” 2.80, “공유경제 관련 정책이나 사업이 축소될 것” 2.52였음
- 그러나 “대중교통 이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전망은 가장 낮은 1.86을 기록해 코로나19 이후라고 하더라도 대중교통의 이용이 급격히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판단됨

민주주의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경우 우리사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서울시의원 50명 중 42명(84%)은 비교적 우리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긍정적으로 인식함

- 반면 8명(16%)은 우리사회가 별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평가했음

〈표 V-18〉 우리사회에 대한 평가

응답	N(%)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0(0.0)
비교적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42(84.0)
별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8(16.0)
매우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0(0.0)
전체	50(100)

코로나19 사태 이후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현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38명(76%)은 중국, 신천지, 성소수자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현상이 현재보다 심각하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

냈음

- 반대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현상이 별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12명(24%)에 불과해 서울시의원들은 코로나19 이후 특정 사회집단에 대한 혐오 현상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서울시의원들이 향후 외국인 노동자, 이민자 증가 등으로 외국인 등 소수자 집단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집단에 대한 사회적 혐오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표 V-19〉 코로나19 사태 이후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에 대한 전망

응답	N(%)
현재보다 매우 심각해질 것이다	8(16.0)
현재보다 약간 심각해질 것이다	30(60.0)
별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12(24.0)
현재보다 약간 개선될 것이다	0(0.0)
현재보다 매우 개선될 것이다	0(0.0)
전체	50(100)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질서의 변화에 대해서는 서울시의원 44명(88%)이 “변화할 것”이라고 응답함

- 이 가운데 ‘아주 많이 변할 것이다’와 ‘약간 변할 것이다’ 항목 응답률은 각각 16명(32%), 28명(56%)으로 ‘급작스런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에 대한 의견이 더 많았음

〈표 V-20〉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질서의 변화 전망

응답	N(%)
아주 많이 변할 것이다	16(32.0)
약간 변할 것이다	28(56.0)
별로 안 변할 것이다	6(12.0)
전혀 안 변할 것이다	0(0.0)
전체	50(100)

2) 코로나19 이후 정부 역할에 대한 전망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에 여러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도 ‘정부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음.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중앙정부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음

- 이에 따라 서울시의원들은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서울시 등의 역할이 어

뎡게 변할 것으로 전망하는지 질문함

첫째,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 “현재보다 커질 것”이라는 응답이 37명(7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표 V-21〉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앙정부의 역할 전망

응답	N(%)
현재보다 매우 커질 것이다	3(6.0)
현재보다 약간 커질 것이다	34(68.0)
지금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10(20.0)
현재보다 약간 작아질 것이다	1(2.0)
현재보다 매우 작아질 것이다	2(4.0)
전체	50(100)

둘째,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울시의 역할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42명(84%)을 차지함

- 이상의 결과를 통해 서울시의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확대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역할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축소되지 않고,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을 알 수 있음

〈표 V-22〉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울시의 역할 전망

응답	N(%)
현재보다 매우 커질 것이다	6(12.0)
현재보다 약간 커질 것이다	36(72.0)
지금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8(16.0)
현재보다 약간 작아질 것이다	0(0.0)
현재보다 매우 작아질 것이다	0(0.0)
전체	50(100)

정부 역할의 확대는 재정상의 압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서울시의원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는 질문함

- 중앙정부 재정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 즉 44명(88%)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함. 반면 중앙정부의 재정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응답은 없었음

〈표 V-23〉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앙정부 재정 상황 전망

응답	N(%)
매우 나아질 것이다	0(0.0)
약간 나아질 것이다	0(0.0)
지금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6(12.0)
약간 어려워질 것이다	28(56.0)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16(32.0)
전체	50(100)

- 서울시의 재정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 46명(92%)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

〈표 V-24〉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울시 재정 상황 전망

응답	N(%)
매우 나아질 것이다	0(0.0)
약간 나아질 것이다	0(0.0)
지금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4(8.0)
약간 어려워질 것이다	28(56.0)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18(36.0)
전체	50(100)

이처럼 서울시의원들은 코로나19 이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와 이에 따른 재정 압박을 전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제약과 재원 확충 등이 중요한 정치적 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짐

4. 코로나19 이후 정책 방향

1)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

이번 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 서울시의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측정함

첫째, 현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서울시의원이 25명(50%), 기대하지 않는 서울시의원이 25명(50%)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음

〈표 V-25〉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평가

응답	N(%)
매우 기대된다	13(26.0)
약간 기대된다	12(24.0)
별로 기대되지 않는다	25(50.0)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	0(0.0)
전체	50(100)

둘째,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34명(68%)의 다수 서울시의원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별 기대가 없다는 응답도 16명(38%)에 달함

〈표 V-26〉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평가

응답	N(%)
매우 기대된다	14(28.0)
약간 기대된다	20(40.0)
별로 기대되지 않는다	16(32.0)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	0(0.0)
전체	50(100)

셋째,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약간 기대된다’, ‘매우 기대된다’와 같은 긍정적인 답변은 34명(68%)으로 긍정적인 기대 인식을 가진 서울시의원이 부정적인 기대 인식을 가진 서울시의원보다 더 많았음

〈표 V-27〉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평가

응답	N(%)
매우 기대된다	4(8.0)
약간 기대된다	30(60.0)
별로 기대되지 않는다	16(32.0)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	0(0.0)
전체	50(100)

2) 향후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방향

코로나19는 우리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임.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의 정책 방향과 그 이전과는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정책방향에 대한 서울시의원들의 의견을 살펴봄
-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문항에 대한 동의의 강도가 강함을 의미함

분석 결과, “앞으로도 팬데믹이 주기적으로 올 것이다”는 전망에 대한 동의가 3.10으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 “감기 등으로 아플 경우 회사나 학교에 가지 않고 쉬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3.04였음
- 또한 “코로나19는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는 2.8였음
- 반면에 “방역 등 공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중간값(2.5)를 살짝 넘긴 2.57에 불과해 서울시의원들은 코로나19 이후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분석에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V-28〉 코로나19 이후 정책방향에 대한 입장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단순한 감기 등 아플 경우, 회사나 학교에 나가지 않고 쉬 수 있어야 한다	49	3.04	0.611
방역 등 공익을 위해 개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된다	49	2.57	0.577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과 같은 팬데믹은 종식되지 않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올 것이다	49	3.1	0.621
코로나19는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결과다	41	2.8	0.749

코로나19 이후 사회정책의 방향에 대해 서울시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석함

첫째,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46명(92%)이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V-29〉 정부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입장

응답	N(%)
매우 필요하다	16(32.0)
약간 필요하다	30(60.0)
별로 필요하지 않다	4(8.0)
전혀 필요하지 않다	0(0.0)
전체	50(100)

둘째, 경제적 지원의 방식과 관련해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16명(32%), ‘재산과 소득을 선별해서 필요한 국민들에게만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34명(68%)이었음

〈표 V-30〉 정부의 경제적 지원 범위에 대한 입장

응답	N(%)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16(32.0)
재산과 소득을 선별해서 필요한 국민들에게만 지원해야 한다	34(68.0)
전체	50(10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서울시의원들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취약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그 지원 방법으로는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됨

마지막으로 향후 고용위기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34명(68%)가 ‘정부가 적극 나서서 기업의 해고방지와 고용유지를 최대한 이뤄야 한다’에 동의함

- ‘지금과 같은 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해고는 일정부분 불가피하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32%(16명)이었음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향후 예상되는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음

〈표 V-31〉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에 대한 입장

응답	N(%)
정부가 적극 나서서 기업의 해고방지와 고용유지를 최대한 이뤄야 한다	34(68.0)
지금과 같은 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해고는 일정부분 불가피하다	16(32.0)
전체	50(100)

이번에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한 서울시의원들의 의견을 살펴봄

첫째, 환경과의 관계에서 기업규제에 대한 입장을 질문한 결과, ‘환경을 위해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에 공감하는 비율이 66%(33명)였음

- 반면 ‘성장을 위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34%(17명)으로, 서울시의원들은 향후 환경을 위해 기업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표 V-32〉 기업 규제에 대한 입장

응답	N(%)
환경을 위해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33(66.0)
성장을 위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17(34.0)
전체	50(100)

둘째,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국가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56%(28명)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았음

- 그러나 “국가부채 증가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므로 재정을 더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44%(22명)나 되기 때문에 향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운용과 관련해 사회적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표 V-33〉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

응답	N(%)
국가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	28(56.0)
국가 부채 증가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므로 재정을 더 확대해서는 안된다	22(44.0)
전체	50(100)

셋째, 재정은 한정돼 있는 반면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역할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증세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증세에 대한 서울시의원들의 의견을 살펴봄

- 서울시의원 50명 중 40명(80%)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당장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불가피하다’도 응답해 증세에 대해 적극적이었음

〈표 V-34〉 증세에 대한 입장

응답	N(%)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당장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불가피하다	40(80.0)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소득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서는 안된다	10(20.0)
전체	50(100)

이번에는 코로나19 이후 우리사회가 나가야할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서울시의원들의 의견을 살펴봄

- ‘분배 vs. 성장’, ‘평등지향 vs. 경쟁지향’, ‘국가책임 강화 vs. 개인 책임 강화’, ‘사회적 연대 vs. 경쟁’, ‘삶의 질 vs. 물질적 풍요’, ‘환경 vs. 개발’ 등 6가지 측면에서 서울시의원들은 어떤 정책지향을 갖고 있는지 분석함
- 측정방법은 정반대되는 정책지향을 양 극단에 놓고, 0~10점까지의 점수 중에서 자신이 어느 입장에 가까운지 체크하도록 함
- 전체적으로 체크한 값이 클수록 성장, 경쟁지향, 개인 책임 강화, 경쟁, 물질적 풍요, 개발 등의 정책지향이 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중앙값은 5점이므로, 5보다 클 경우 위에서 언급한 정책지향이 강한 것으로 판단 가능함

분석 결과, 정책적 지향으로써 분배 지향(4.12), 평등지향(4.68), 국가책임 강화(3.80), 사회적 연대(3.96), 삶의 질(3.68), 환경 지향(3.72) 등이 상대적으로 강했음

〈표 V-35〉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책방향에 대한 입장

구분 (중간값 5)	N	평균	표준 편차
분배를 더 중요시하는 사회 vs. 성장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	50	4.12	2.067
개인 간의 능력 차이를 보완한 평등사회 vs. 개인 간의 능력 차이를 인정하고 경쟁력을 중시하는 사회	50	4.68	2.015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위험에 대해 사회 보장 등 국가의 책임이 높은 사회 vs. 세금을 적게 내는 대신 위험에 대해 개인의 책임이 높은 사회	50	3.8	2.176
연대와 협력이 우선시되는 사회 vs. 경쟁과 자율이 우선시되는 사회	50	3.96	2.330
삶의 질에 가치를 두는 사회 vs. 경제적 성취를 중시하는 사회	50	3.68	2.567
환경과 생태를 중요시하는 사회 vs. 개발과 성장을 중요시하는 사회	50	3.72	2.548

특히 이러한 정책지향은 응답자의 보수적 정치성향과 상관관계가 높음

- 응답자의 보수적 정치성향을 10점으로 측정하고, 위의 각 정책지향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표 V-36〉 정치성향과 정책성향 간 상관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보수적 정치성향							
②분배지향	-.760 **						
③평등지향	-.647 **	.862* *					
④국가책임강화	-.793 **	.877* *	.786* *				
⑤사회적 연대	-.660 **	.934* *	.850* *	.844* *			
⑥삶의 질	-.716 **	.915* *	.832* *	.887* *	.878* *		
⑦환경 지향	-.581 **	.782* *	.809* *	.866* *	.775* *	.910* *	

위의 상관관계분석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보수적 정치성향이 강할수록 각 정책지향의 반대성향이 강해짐

- 또한 각 정책성향 간에는 강한 상관성이 존재함. 이는 주관적 정치성향과 각 정책에 대한 입장으로 드러나는 객관적 정치성향이 서울시의원의 경우 매우 일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이번에는 구체적 정책으로, 최근 대중적 관심을 받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서울시의원들의 의견을 살펴봄
-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44%(22명), 반대하는 비율은 56%(28명)로, 상대적으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음
- 이는 최근 학계와 미디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정책결정권자인 정치엘리트들 사이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한 입법 연합을 구성하기에는 아직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V-37〉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

응답	N(%)
매우 동의한다	6(12.0)
대체로 동의한다	16(32.0)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24(48.0)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8.0)
전체	50(100)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치적·행정적 리더십이 중요함. 그래서 서울시의원들은 향후 국가지도자와 서울시장으로 어떤 유형의 리더가 적합한지 질문함

- 첫째, 국가지도자로서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87.5%로 압도적으로 많았음
- 둘째, 서울시장 등 지방정부의 수장 역시 ‘민주적 의사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83.0%로 압도적으로 많았음

〈표 V-38〉 바람직한 리더의 모습

	응답	N(%)
국가지도자	다소 권위주의적이라도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	6(12.5)
	민주적 의사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42(87.5)
	전체	48(100)
서울시장 등 지방정부 수장	다소 권위주의적이라도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	8(17.0)
	민주적 의사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39(83.0)
	전체	47(100)

즉 서울시의원들은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는 ‘큰 정부’를 예상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정부의 운영방식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함

3) 서울시의 정책 방향

이번에는 향후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대해 서울시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석함

-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의 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이 향후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매우 중요함

먼저 코로나19 이후에도 전세계적 유행병이 자주 출현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방역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합치된 의견임

- 이를 반영해 미래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어떤 부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지를 질문함
- 질문은 해당 정책의 ‘중요도’와 ‘시급성’으로 구분하고, 각각 5점 척도로 측정함

〈표 V-39〉 서울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정책

감염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	N	중요성		시급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50	4.36	0.851	4.12	1.043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지원	50	4.32	0.741	4.24	0.771
보건소 등 방역체계 강화	50	4.48	0.646	4.36	0.693
의료인력 확보	49	4.12	0.666	3.96	0.781
방역 전문가 확보	50	4.08	0.634	3.92	0.752
시민들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	50	4.08	0.900	3.88	0.918
시민과의 협력시스템 구축	50	3.8	0.700	3.72	0.730
지역별 건강 격차 해소	50	4	0.639	3.8	0.700
데이터기반 공공서비스 강화	50	3.8	0.756	3.48	0.863
개인정보보호	50	3.6	0.700	3.38	0.780

위의 〈표〉를 보면, 향후 자주 출현할 감염병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의 중요도는 ‘보건소 등 방역체계 강화’가 4.48로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4.36,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지원’ 4.32, ‘의료 인력 확보’ 4.12 등 순이었음

미래의 감염병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의 시급성의 경우 ‘보건소 등 방역체계 강화’가 4.3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지원’ 4.24,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4.12 등 순이었음

이번에는 중요도와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각각을 50%씩의 가중치를 부여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함

- 이때 정책의 우선순위는 중요도와 시급성을 동시에 고려한 것임

〈그림 V-3〉 감염병 피해 방지를 위한 서울시 정책의 우선순위



위의 〈그림 V-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감염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정책의 우선순위를, 해당 정책의 중요도와 시급성을 동시에 고려해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 등 방역체계 강화가 4.42로 가장 우선순위가 높았음

- 다음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지원 4.28,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4.24, 의료인력 확보 4.04, 방역전문가 확보 4.0 등 순이었음
- 이에 비해 신속한 정보 제공, 지역별 건강 격차 해소, 시민과의 협력체계 구축, 데이터기반 공공서비스, 개인정보보호 등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았음
-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의원들은 향후 발생할 감염병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건의료 체계의 강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등일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행정관리 측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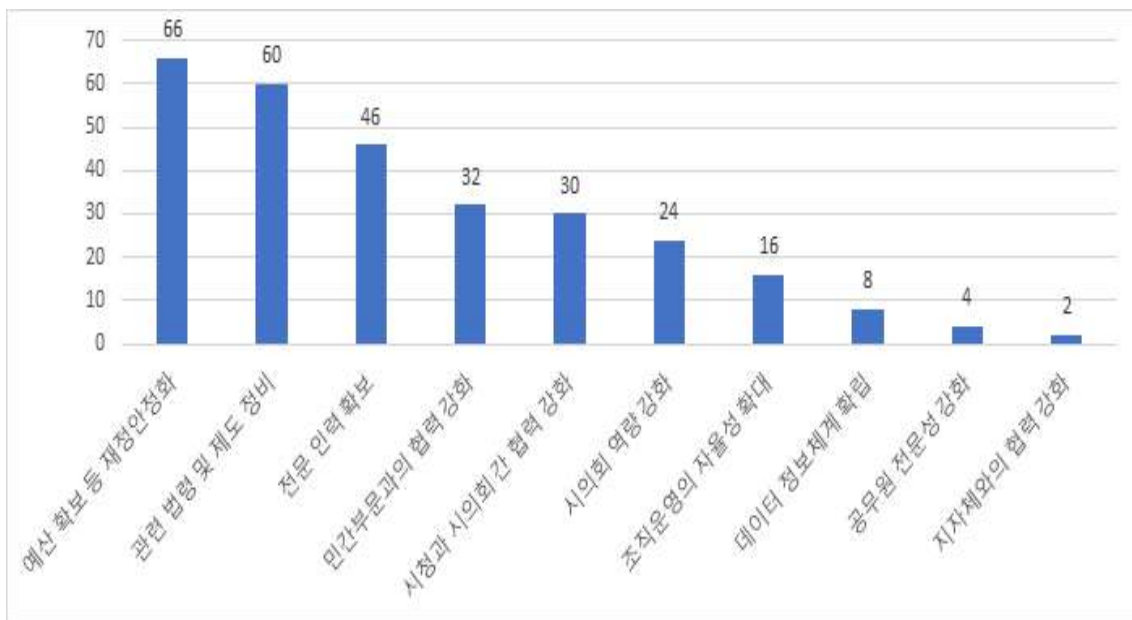
-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며, 인력과 조직,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함. 이와 함께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도 갈수록 중요해질 전망이다
- 이런 점들을 고려해 서울시의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정적으로 어떤 요인이 필요한지를 질문
- 위를 위해 행정관리와 관련된 10개 항목을 제시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1~3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함

분석결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항목은 응답자의 33%가 ‘예산확보 등 재정안정화’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20.8%, ‘전문인력 확보’ 16%,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 16% 순이었음

- 10개 항목의 종합 성적을 매기기 위해 1순위에는 3점, 2순위에는 2점, 3순위에는 1점을 주는 방식으로 각 항목별 종합 성적을 매김
- 그 결과는 다음의 <그림 V-4>과 같음

<그림 V-4> 감염병 피해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행정 관리 우선 순위



위의 <그림 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가 향후 빈발한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행정 관리 측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산 확보 등 재정안정화가 종합점수 66점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 다음으로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60, 전문 인력 확보 46,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 32, 시청과 시의회 간 협력 강화 30, 시의회 역량 강화 24,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대 16, 데이터 정보체계 확립 8, 공무원 전문성 강화 4, 지자체와의 협력 2 등 순이었음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서울시의원들은 향후 감염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보건의료 체계의 강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등을 꼽았으며, 이를 위해 예산 확보,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전문 인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5. 시사점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서울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정책 결정은 결국 지방정부 차원의 정치엘리트들의 영향력 아래 이뤄지기 때문에 이들의 미래 전망과 정책 성향이 어떤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미래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이를 분석함

서울시의원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함

- 특히 서울시의 대응을 의료적 대응과 경제적 대응으로 구분했을 때, 경제적 대응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서울시의 대응을 16개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보의 투명성’,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 ‘의료치료’, ‘출입국 관리’, ‘주요 관광사업 통제’, ‘의료진 등 현장인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 ‘사회적 분위기 안정’, ‘의약품 관련 수급관리’, ‘이동제한’, ‘생활방역 캠페인’, ‘중앙정부와의 협력’ 등은 평균 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받음
- 이에 비해 ‘가짜뉴스 체크’, ‘마스크공급’, ‘마스크 등 관련 용품 가격인상 통제’, ‘시의회와의 협력’, ‘경기도와의 협력’, ‘자자체와의 협력’, ‘직원 교육과 훈련’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음

서울시의원들은 코로나19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향후 ‘큰 정부’ 이념에 따른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정책방향을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으로 나눠 살펴봄
- 첫째, 사회정책의 방향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복지정책을 강화하되, 지원방식은 보편복지보다는 선별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일자리 감소와 고용위기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었음
- 둘째, 경제정책의 방향은 환경 보호를 위해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선호했으며,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선호하고 있었음. 특히 복지강화, 사회적 안정망 확충, 경기회복 등을 위한 증세에도 적극적이었음
- 서울시의원들의 이러한 사회정책 및 경제정책 선호는 향후 서울시의 정책이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하는 것임

특히 서울시의원들의 정책 입장이 ‘분배 지향’, ‘평등 지향’, ‘국가책임 강화’, ‘사회적 연대’, ‘삶의 질’, ‘환경 지향’ 등을 강조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향후 서울시의 정책도 이들의

정책 입장 및 선호를 반영하는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짐

이를 배경으로 서울시의원을 대상으로 향후 서울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영역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함

- 중요도와 시급성을 동시에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하면, 보건서 등 방역체제 강화,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의료인력 확보, 방역 전문가 확보, 시민들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 지역별 건강 격차 해소, 시민과의 협력 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강화, 개인정보보호 등 순이었음
- 전체적으로 보건의료체제 강화와 소상공인·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 등을 최우선정책으로 꼽았음

다음으로 서울시가 위에서 언급한 최우선정책들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함

- 이는 서울시의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 분석결과, 서울시의원들은 코로나19 이후 서울시의 최우선정책 시행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예산 확보 등 재정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답함. 다음으로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전문인력 확보,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 시청과 시의회 간 협력 강화, 시의회 역량 강화,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대, 데이터 정보체계 확립, 공무원 전문성 강화,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등 순이었음

이상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서울시의원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서울시의 최우선정책으로 보건의료체제 강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음
- 또한, 이를 위해 예산 확보 등 지방정부의 재정책확충이 필요하며,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VI.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세계와 새로운 도전과제 등을 전망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코로나19 이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해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봄. 이와 함께 서울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들의 미래 전망과 향후 정책 방향을 분석해봄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함

먼저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세계의 변화상은 다음과 같이 전망됨

첫째, 정치적 변화의 측면에서 국제적 수준에서 지금까지 세계화의 흐름이 약화되고, 민족주의적, 일국주의적 성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국내적 수준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따른 작은 정부의 흐름이 약화되고,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큰 정부’의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는 ‘큰 정부’로의 경향은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야기한 원인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환경파괴에 있다는 성찰에 근거함
- 이러한 성찰에 근거해 환경과 생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고삐풀린 시장에 대한 일정의 규제와 필요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
- 동시에 코로나19가 초래한 공중보건상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둘째, 경제적 변화의 측면에서 지난 시기 세계화에 근거한 국제분업질서가 일정하게 해체되고, 자국 내에서 일정하게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 국내적으로는 온라인쇼핑, 비대면 서비스 등 비대면 산업 분야의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선진국들은 국제분업에 근거한 아웃소싱으로 자국 내에서 마스크도 생산하지 못한 채 중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음. 이러한 경험은 선진국들로 하여금 필수 제조업 기반을 자국으로 이전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과거와 같은 국제분업질서에 근거한 세계화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코로나19로 인한 일국 내 경제위기는 내수에 의존하던 기존의 영세 산업 등의 몰락을 촉진하는 한편, 온라인쇼핑, 비대면 서비스 등과 같은 새로운 산업의 등장을 불러와 산업구조조정의 압력으로 나타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사회적 변화의 측면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위험이 사회경제적 분열선에 따라 불평등하게 나타남에 따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과거와 같은

성장주의 및 물질주의에 대한 사회적 반성의 분위기가 일어나면서 개인의 건강과 환경보호, 생태적 조화를 추구하는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사회적 취약계층의 존재, 그리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적 포용성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정책에 대한 요구로 드러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대만, 독일, 일본의 사례를 검토함

- 첫째, 대만의 경우 ICT 기술을 활용한 정보 공유 및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방역물자를 관리하고, 공중보건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방역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음. 특히 방역과 함께 민생안정과 경제충격 완화를 위한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을 병행함으로써 코로나19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음
- 둘째, 독일의 경우 코로나19 발발 초기 국면에서는 비교적 방역에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2020년 하반기부터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2차 쇼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당시 공중보건상의 위기를 맞고 있음. 그러나 초기 국면에서는 의료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감염의 확산을 막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됨
-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 2020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해 의도적으로 방역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러한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지방정부와의 갈등을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방역 실패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됨. 특히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과 소극적인 정보 공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보 공유 부재와 ICT 기술을 방역에 활용하지 못한 경직성 등이 주요하게 비판받고 있음

해외 국가들의 이러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은 향후 한국 정부의 방역대책 수립과 코로나19 피해 수급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임

- 특히 일본과 독일의 사례에서 행정학적으로 문제시되는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 및 협력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는 점임
- 독일의 경우 초기 불협화음을 봉합하여, 어느 정도 협력이 이루어졌으나, 2020년 하반기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발생 초기부터 2020년 12월 현재까지도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적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이에 비해 한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이 비교적 잘 이뤄지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향후 지속적인 방역 성과를 위해서는 정부 간 협력이 긴밀하게 이뤄져야 할 것임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서울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정책 결정은 결국 지방정부 차원의 정치엘리트들의 영향력 아래 이뤄지기 때문에 이들의 미래 전망과 정책 성향이 어떤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미래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이를 분석함

서울시의원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함.

- 특히 서울시의 대응을 의료적 대응과 경제적 대응으로 구분했을 때, 경제적 대응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서울시의 대응을 16개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보의 투명성’,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 ‘의료치료’, ‘출입국 관리’, ‘주요 관광사업 통제’, ‘의료진 등 현장인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 ‘사회적 분위기 안정’, ‘의약품 관련 수급관리’, ‘이동제한’, ‘생활방역 캠페인’, ‘중앙정부와의 협력’ 등은 평균 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받음
- 이에 비해 ‘가짜뉴스 체크’, ‘마스크공급’, ‘마스크 등 관련 용품 가격인상 통제’, ‘시의회와의 협력’, ‘경기도와의 협력’, ‘자자체와의 협력’, ‘직원 교육과 훈련’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음

서울시의원들은 코로나19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향후 ‘큰 정부’ 이념에 따른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정책방향을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으로 나눠 살펴봄
- 첫째, 사회정책의 방향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복지정책을 강화하되, 지원방식은 보편복지보다는 선별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일자리 감소와 고용위기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었음
- 둘째, 경제정책의 방향은 환경보호를 위해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선호했으며,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선호하고 있었음. 특히 복지강화, 사회적 안정망 확충, 경기회복 등을 위한 증세에도 적극적이었음
- 서울시의원들의 이러한 사회정책 및 경제정책 선호는 향후 서울시의 정책이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하는 것임

특히 서울시의원들의 정책 입장이 ‘분배 지향’, ‘평등 지향’, ‘국가책임 강화’, ‘사회적 연대’, ‘삶의 질’, ‘환경 지향’ 등을 강조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향후 서울시의 정책도 이들의 정책 입장 및 선호를 반영하는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짐

이를 배경으로 서울시의원을 대상으로 향후 서울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영역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함

- 중요도와 시급성을 동시에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하면, 보건서 등 방역체제 강화,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의료인력 확보, 방역전문가 확보, 시민들에게 신속한 정보제공, 지역별 건강 격차 해소, 시민과의 협력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강화, 개인정보보호 등 순이었음
- 전체적으로 보건의료체제 강화와 소상공인·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 등을 최우선정책으로 꼽았음

다음으로 서울시가 위에서 언급한 최우선정책들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함

- 이는 서울시의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 분석 결과, 서울시의원들은 코로나19 이후 서울시의 최우선정책 시행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예산확보 등 재정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답함. 다음으로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전문인력 확보,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 시청과 시의회 간 협력 강화, 시의회 역량 강화,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대, 데이터 정보체계 확립, 공무원 전문성 강화,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등 순이었음

이상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서울시의원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서울시의 최우선정책으로 보건의료체제 강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음
- 또한, 이를 위해 예산확보 등 지방정부의 재정책충이 필요하며,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2. 시사점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미래예측, 해외 사례 검토, 서울시의원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실시함

-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정책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먼저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 대한 미래예측에 기반해 다음의 정책방향을 도출할 수 있음

- 첫째, 앞으로 환경과 생태에 대한 정책적 관심에 따라 저탄소 사회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
- 둘째, 비대면에 대한 경험은 향후에도 그에 대한 수요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언택트 사회를 위한 교육, 업무, 산업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
- 셋째, 코로나19로 드러난 사회적 양극화와 취약계층의 존재는 앞으로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 등 포용적 사회정책에 대한 요구로 드러날 것임
- 넷째, 향후에 빈발한 것으로 예상되는 전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체계의 강화가 요구됨.
- 마지막으로 이상의 정책 수요를 실제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리더십이 요구되며,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와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이 요구됨

다음으로 대만, 독일, 일본의 사례분석, 그리고 OECD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 OECD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정책방향으로 i)포용적 회복(inclusive recovery), ii)친환경 회복(green recovery), iii)스마트 회복(smart recovery)로 권고함
- 포용적 회복은 점차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의 확산에 대한 대응을, 친환경회복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단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임. 이와 함께 디지털화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언택트 사회에 대응할 것을 요구함

특히 지방정부가 이러한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융합적 거버넌스의 구축과 정책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견실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OECD의 이러한 정책권고안은 사실상 미래예측에 근거한 정책방향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정책방향 설정에 있어서 일정한 컨센서스가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됨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정책방향에 대한 이러한 콘센서스는 서울시 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 즉 서울시의원들은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는 ‘큰 정부’로의 흐름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포용적 사회정책, 생태와의 조화를 모색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확장적 재정 운용과 같은 경제정책을 선호하고 있었음

특히 서울시의 역할과 관련해 서울시의원들은 보건의료체제의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최우선 정책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의 확보,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음

정치엘리트들의 이러한 정책선호와 정책판단 등을 향후 서울시의 정책이 그러한 방향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 문헌 〉

■ 연구논문

- 김진숙. 「코로나19 대응 원격교육 성과와 과제」.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0(1), 462-471, 2020
- 김진유. 「포스트코로나시대 도시계획의 과제」. Urban planners, 7(3), 11-15, 2020
- 박지성.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언택트) 산업과 전파」. 전자파기술, 31(3), 63-65, 2020
- 반정화. 「지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사례: 서울시 정책 동향」, 한국관광정책, 80, 99-103, 2020
- 배영임·신혜리. 「코로나19, 언택트 사회를 가속화하다」. 이슈&진단, 416, 1-26, 2020
- 손창우. 「코로나 19 (COVID-19) 대응을 통해 본 서울시 신종감염병 관리의 현재와 미래」. 정책리포트, 299, 1-36, 2020
- 윤익준.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법적 문제: 메르스 사례로 본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의 한계와 대안」. 법과 정책연구, 18(3), 99-122, 2018
- 윤정현. 「COVID-19 이후, 뉴노멀과 미래 사회 변화」. FUTURE HORIZON, 46, 4-7, 2020
- 윤정섭.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동 패러다임의 변화」. FUTURE HORIZON, 46, 68-73, 2020
- 이성우·정성희. 「국제질서를 흔든 코로나19: 인간안보와 가치연대의 부상」. 이슈&진단, 413, 1-25, 2020
- 전재성. 「코로나 사태 이후의 국제정치 변화」. 철학과 현실, 126, 147-162, 2020
- 정태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내용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0(3), 289-316, 2020

■ 서울시의회 보고서

- 경기개발연구원. 「코로나19 경제위기, 끝은 보이고 있는가?」, 2020
- 박진아·윤소은. 「지방정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방안」, GRI정책Brief, 경기연구원, 2020
-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농림축산식품부·한국과학기술한림원. 「IAP 식량영양안보와 농업: 한국의 전망」, 2016

■ 보도자료

김진욱, “흑인이 코로나에 더 취약.. 미국 사회 구조적 불평등 드러나”, 한국일보, 2020.04.0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081694750170>)

송계숙, “코로나 19, 독일 온라인 쇼핑의 기폭제 역할”,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10.20.,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5309>)

Kasriel, E. “A ‘mass experiment’ for the climate”. BBC. 2020.06.25., (<https://www.bbc.com/future/article/20200624-has-covid-19-brought-us-closer-to-stopping-climate-change>)

(판권지)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과제와 역할

제안단체 : 서울특별시의회 스마트도시 서울 연구모임

홈페이지 : <http://www.smc.seoul.kr>

연 락 처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입법담당관)

연구기관 :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 : 신현기

연 락 처 : 02-2164-4118

관리번호 : 의연단20-17

※ 본 학술연구용역보고서의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할 수 있음)

부록1. 사업타당성 및 센터타당성 설문지

포스트코로나 時代, 지방정부·지방의회의 과제와 역할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서울시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는 서울시의회의 의뢰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방정부·지방의회의 과제와 역할’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연구팀입니다.

우리는 작금의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사회가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숙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작성해 주신 설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방향을 마련하는데 더없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설문에서 밝힌 의견은 통계법에 의거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오직 통계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평소 생각하셨던 바를 솔직히 답해 주신다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 조사기관: 가톨릭대 행정학과 연구팀
- 책임연구원: 000 교수
- 연구보조원: 000 조교 / 000 조교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A. 코로나19사태 대응에 대한 평가

A01.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얼마나 잘 대응했다고 보십니까?

- ①매우 잘했다. ②어느정도 잘했다. ③보통이다.
④별로 잘하지 못했다. ⑤매우 잘하지 못했다 ⑥잘 모르겠다/말하기 어렵다.

A02. 서울시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의료적 대응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매우 불만족스럽다 ②다소 불만족스럽다. ③보통이다.
④다소 만족스럽다 ⑤매우 만족스럽다 ⑥잘 모르겠다/말하기 어렵다.

A03. 서울시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경제적 대응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매우 불만족스럽다 ②다소 불만족스럽다. ③보통이다.
④다소 만족스럽다 ⑤매우 만족스럽다 ⑥잘 모르겠다/말하기 어렵다.

**A04.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매우 잘한 일이다 ②비교적 잘한 일이다
③비교적 잘못된 일이다 ④매우 잘못된 일이다

A05.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회복을 위해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 중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

- ①소상공인 관련 지원(긴급경영지원금, 대출연장 등)
②고용유지 관련 지원(휴직자 고용유지 지원, 유급휴가 지원 등)
③취업·구직 관련 지원(직업훈련비 지원,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④교육·육아 관련 지원(돌봄 지원, 온라인 교육 관련 지원 등)
⑤ 기타 (-----)

A06. 서울시가 제공하는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십니까?

- ①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보통이다
④약간 도움이 된다 ⑤매우 도움이 된다.

**A07. 다음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1.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은 확산 방지를 위해 개별적으로 위생관리를 잘 하고 있다.	1	2	3	4	5
2.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은 성숙해 있다.	1	2	3	4	5
3. 나는 코로나19 발생 후 우리사회 시민들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	1	2	3	4	5
4. 나는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 본 사람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1	2	3	4	5
5. 우리사회는 빠른 시간 안에 경제 회복 등 위기를 잘 극복할 것이다.	1	2	3	4	5

A08.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의 업무(학업) 환경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코로나19 이전 생활과 비교하여 얼마나 효율적이라고(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효율적이다 ② 약간 효율적이다 ③ 별 차이 없다 ④ 다소 비효율적이다 ⑤ 매우 비효율적이다

A09.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된 다음의 각 항목에서 서울시가 얼마나 잘 대응했는지를 점수(1점~5점)를 매겨주세요.

서울시의 대응	매우 못했다	약간 못했다	보통이다	약간 잘했다	매우 잘했다
1. 정보의 투명성	1	2	3	4	5
2.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	1	2	3	4	5
3. 가짜뉴스 팩트체크	1	2	3	4	5
4. 마스크 공급	1	2	3	4	5
5. 의료치료 (격리 수용, 치료 등)	1	2	3	4	5
6. 출입국 관리 (해외에서 온 입국자 관리 등)	1	2	3	4	5
7. 주요 관광사업 통제	1	2	3	4	5
8. 의료진 등 현장인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	1	2	3	4	5
9. 사회적 분위기 안정	1	2	3	4	5
10. 의약품 관련 물품에 대한 수급관리(마스크 제외)	1	2	3	4	5
11. 마스크 등 관련 용품의 인상에 대한 가격통제	1	2	3	4	5
12. 경제적 지원(소상공인 등)	1	2	3	4	5
13. 이동 제한(학교 개강 연기 등)	1	2	3	4	5
14. 생활방역 캠페인	1	2	3	4	5

15. 시의회와의 협력	1	2	3	4	5
16. 중앙정부와의 협력	1	2	3	4	5
17. 경기도와의 협력	1	2	3	4	5
18. 지자체와의 협력	1	2	3	4	5
19. 감염병 대응에 위한 직원 교육과 훈련	1	2	3	4	5

**A10. 생활방역과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더 공감이 가십니까?

- ① 지금과 같은 생활방역으로 코로나19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
- ② 이전에 실시한 사회적(물리적) 거리 두기 수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 ③ 이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보다 더 엄격하고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

**A11.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 신천지, 성소수자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므로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 ②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므로 걱정 된다

**A12.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이 변화하였습니까?

항목	이전보다 매우 신뢰하게 되었다	이전보다 약간 신뢰하게 되었다	이전과 별 차이 없다	이전보다 신뢰가 약간 낮아졌다	이전보다 신뢰가 매우 낮아졌다
1. 서울시의 역량	1	2	3	4	5
2.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1	2	3	4	5
3. TV, 신문 등 미디어	1	2	3	4	5
4. 대한민국 정부	1	2	3	4	5

A13.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앙정부, 서울시, 서울시의회, 지자체의 대응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코로나 대응 평가	점수 (100점 만점)
중앙정부	점
서울시	점
서울시의회	점
지자체	점

B.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변화 전망

**B01. 귀하께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아주 많이 변할 것이다 ②약간 변할 것이다 ③별로 안 변할 것이다 ④전혀 안 변할 것이다

**B02.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어려워 질 것이다 ②약간 어려워질 것이다
 ③별로 어려워지지 않을 것이다 ④전혀 어려워지지 않을 것이다

B03. 다음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 겠다
**1.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장애인, 경제적 약자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될 것이다.	1	2	3	4	5
2.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 등이 심화될 것이다.	1	2	3	4	5
**3. 코로나19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 커질 것이다	1	2	3	4	5
4.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재택근무가 늘어날 것이다.	1	2	3	4	5
5.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쇼핑, 온라인 배달 등이 늘어날 것이다.	1	2	3	4	5
6. 코로나19 이후 학교에서 온라인 교육이 늘어날 것이다.	1	2	3	4	5
7.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교육성취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1	2	3	4	5
**8. 우리나라는 이번 기회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더 나은 사회로 갈 것이다	1	2	3	4	5
9. 코로나19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 같다.	1	2	3	4	5

B04. 코로나19 이후 서울시와 관련된 다음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1. 코로나19 이후 대중교통 이용이 감소할 것이다.	1	2	3	4	5
2. 코로나19 이후 공유경제 관련 정책이나 사업이 축소될 것이다.	1	2	3	4	5
3. 코로나19 이후 공공기관은 비대면 시스템을 통한 공공서비스를 늘릴 것이다.	1	2	3	4	5
4. 코로나19 이후 서울시의 지역간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다.	1	2	3	4	5
5. 코로나19 이후 서울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1	2	3	4	5

**B05. 귀하께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후위기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①이전 보다 매우 커졌다 ②이전 보다 약간 커졌다 ③이전과 별 차이 없다
 ④이전 보다 약간 작아졌다 ⑤이전 보다 매우 작아졌다

**B06. 민주주의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사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②비교적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③별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④매우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B07.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 신천지, 성소수자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현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①현재보다 매우 심각해질 것이다. ②현재보다 약간 심각해질 것이다. ③별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④현재보다 약간 개선될 것이다. ⑤현재보다 매우 개선될 것이다.

B08. 귀하께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앙정부의 역할이 현재와 비교해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현재보다 매우 커질 것이다. ②현재보다 약간 커질 것이다. ③지금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④현재보다 약간 작아질 것이다. ⑤현재보다 매우 작아질 것이다.

B09. 귀하께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울시의 역할이 현재와 비교해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현재보다 매우 커질 것이다. ②현재보다 약간 커질 것이다. ③지금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④현재보다 약간 작아질 것이다. ⑤현재보다 매우 작아질 것이다.

B10. 귀하께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앙정부의 재정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②약간 어려워질 것이다. ③지금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④약간 나아질 것이다 . ⑤매우 나아질 것이다.

B11. 귀하께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울시의 재정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②약간 어려워질 것이다. ③지금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④약간 나아질 것이다 . ⑤매우 나아질 것이다.

**B12. 귀하께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질서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아주 많이 변할 것이다 ②약간 변할 것이다 ③별로 안 변할 것이다 ④전혀 안 변할 것이다

C. 코로나19 이후 정책방향

**C01. 정부는 친환경·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기대된다 ②약간 기대된다 ③별로 기대되지 않는다 ④전혀 기대되지 않는다

**C02. 정부는 모든 취업자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기대된다 ②약간 기대된다 ③별로 기대되지 않는다 ④전혀 기대되지 않는다

**C03.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실직자도 일정한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곧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기대된다 ②약간 기대된다 ③별로 기대되지 않는다 ④전혀 기대되지 않는다

**C04. 감염병 확산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과, 기본소득은 결국 증세 등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동의한다 ②대체로 동의한다 ③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④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C05. 다음 질문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 다
1. 단순한 감기 등 아플 경우, 회사나 학교에 나가지 않고 실 수 있어야 한다.	1	2	3	4	5
2. 방역 등 공익을 위해 개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된다.	1	2	3	4	5
3.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과 같은 팬데믹은 종식되지 않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올 것이다.	1	2	3	4	5
4. 코로나19는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결과다.	1	2	3	4	5

**C06.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사회의 소득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①매우 필요하다 ②약간 필요하다 ③별로 필요하지 않다 ④전혀 필요하지 않다

**C07. 향후 정부가 국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경우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①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②재산과 소득을 선별해서 필요한 국민들에게만 지원해야 한다

**C08.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입장에 더 공감이 가십니까?

①정부가 적극 나서서 기업의 해고방지와 고용유지를 최대한 이뤄야 한다
②지금과 같은 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해고는 일정부분 불가피하다

**C09. 환경과 기업과의 관계와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더 공감이 가십니까?

①환경을 위해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②성장을 위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C10.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재정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①국가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
②국가 부채 증가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므로 재정을 더 확대해서는 안 된다

**C11. 증세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입장에 더 공감이 가십니까?

①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당장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불가피하다
②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소득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서는 안 된다

**C12. 귀하는 우리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쪽 입장에 더 공감하십니까?

←-----중도----->												
분배를 더 중요시하는 사회	0	1	2	3	4	5	6	7	8	9	10	성장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
개인 간의 능력 차이를 보완한 평등사회	0	1	2	3	4	5	6	7	8	9	10	개인 간의 능력 차이를 인정하고 경쟁력을 중시하는 사회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위험에 대해 사회 보장 등 국가의 책임이 높은 사회	0	1	2	3	4	5	6	7	8	9	10	세금을 적게 내는 대신 위험에 대해 개인의 책임이 높은 사회
연대와 협력이 우선시되는 사회	0	1	2	3	4	5	6	7	8	9	10	경쟁과 자율이 우선시되는 사회
삶의 질에 가치를 두는 사회	0	1	2	3	4	5	6	7	8	9	10	경제적 성취를 중시하는 사회
환경과 생태를 중요시하는 사회	0	1	2	3	4	5	6	7	8	9	10	개발과 성장을 중요시하는 사회

**C13.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① 다소 권위주의적이라도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
- ② 민주적 의사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C14. 앞으로 서울시 등 지방정부 수장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① 다소 권위주의적이라도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
- ② 민주적 의사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C15. 다음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감염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정책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정책의 중요도와 시급성을 1~5점으로 평가해주시요.

감염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	중요도 (1~5점)					시급성(1~5점)				
	전혀 안중 요	거의 안중 요	보통	약간 중요	매우 중요	전 혀안 시급	거의 안시 급	보통	약간 시급	매우 시급
1.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1	2	3	4	5	1	2	3	4	5
2.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지원	1	2	3	4	5	1	2	3	4	5
3. 보건소 등 방역체계 강화	1	2	3	4	5	1	2	3	4	5
4. 의료인력 확보	1	2	3	4	5	1	2	3	4	5
5. 방역 전문가 확보	1	2	3	4	5	1	2	3	4	5
6. 시민들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	1	2	3	4	5	1	2	3	4	5
7. 시민과의 협력시스템 구축	1	2	3	4	5	1	2	3	4	5
8. 지역별 건강 격차 해소	1	2	3	4	5	1	2	3	4	5
9. 데이터기반 공공서비스 강화	1	2	3	4	5	1	2	3	4	5
10. 개인정보보호	1	2	3	4	5	1	2	3	4	5

C16.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위의 영역에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골라주시요.

우선순위	필요한 조치
1순위	
2순위	
3순위	

①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②전문 인력 확보
③공무원 전문성 강화	④예산 확보 등 재정안정화
⑤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대	⑥데이터 정보체계 확립
⑦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	⑧시의회 역량 강화
⑨시청과 시의회 간 협력 강화	⑩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C17. 귀하의 정치적 이념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진보 <-----중도-----> 보수										
0	1	2	3	4	5	6	7	8	9	10

**C18. 귀하가 보시기에 다음 각 정당들의 이념성향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보 <----- 중도 -----> 보수										
0	1	2	3	4	5	6	7	8	9	10

- ① 더불어민주당 []
- ② 국민의힘 []
- ③ 국민의당 []
- ④ 정의당 []
- ⑤ 열린민주당 []

D. 서울시의회 사무처 평가

이번 파트는 서울시의회 사무처에 대한 평가입니다. 각 항목을 읽으시고, 동의 정도를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D01. 서울시의회 사무처의 업무에 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울시의회 사무처 업무 평가	매우 동의 않음	동의 않음	보통	동의	매우 동의
사무처는 주어진 시간 안에 일을 효과적으로 완수한다.					
사무처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한다.					
사무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D02. 서울시의회 사무처의 조직관리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의회 사무처 조직관리에 대한 의견	매우 동의 않음	동의 않음	보통	동의	매우 동의
상급자는 하급자의 업무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의견을 제시한다.					
상급자는 하급자의 고충을 알고 이해하고 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상급자와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다.					
동료들 사이에서, 업무상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동료들과의 의사소통은 흥미롭고 도움이 된다.					
사무처의 운영에 대하여 우리는 의견을 나눈다.					
사무처 운영 관련 회의는 충실하고 체계적이다.					

전반적으로 사무처의 의사전달체계는 합리적이다.					
비공식적 모임(동아리, 친목모임 등)을 통해 업무수행 관련 여러 정보를 얻는다.					
비공식적 모임은 업무수행과 상호협조에 도움이 된다.					
나는 조직에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않는다.					
나는 조직을 떠날 마음이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발설하지 않는다.					
나는 조직에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자신과 관련된 상황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지 않는다.					
나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이 걱정되어,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지 않는다.					
나는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염려되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나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돌아올 것이 걱정되어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침묵한다.					
나는 전반적으로 나의 직무에 만족한다.					
사무처의 업무 성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사무처의 업무는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급여 및 수당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나는 사무처에서 나의 성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나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는 물론 시의회와 사무처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주변에 사무처를 좋은 직장이라고 말한다.					
나는 어떤 직무라도 성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한다.					
우리 사무처 구성원들은 사무처를 떠나고 싶어 한다.					
우리 사무처 구성원들은 기회가 된다면 서울시 다른 부서로 옮기고 싶어 한다.					
나는 사무처를 떠나고 싶다.					
나는 기회가 된다면 서울시 다른 부서로 옮기고 싶다.					

E. 기초 자료

E0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남성 ②여성

E02.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만 ()세

E03. 귀하가 속한 정당은 어디입니까?

- ①더불어민주당 ②국민의힘 ③민생당 ④정의당

E04. 귀하의 지역구는 어디입니까?

- ①강남구 ②강동구 ③강북구 ④강서구 ⑤관악구
⑥광진구 ⑦구로구 ⑧금천구 ⑨노원구 ⑩도봉구
⑪동대문구 ⑫동작구 ⑬마포구 ⑭서대문구 ⑮서초구
⑯성동구 ⑰성북구 ⑱송파구 ⑲양천구 ⑳영등포구
21.용산구 22.은평구 23.종로구 24.중구 25.중랑구

E05. 귀하는 몇 선입니까?

- ①초선 ②재선 ③3선 ④4선 ⑤5선 이상

E06. 귀하가 속한 상임위원회는 어느 곳입니까?

- ①운영위원회 ②행정자치위원회 ③기획경제위원회 ④환경수자원위원회
⑤문화체육관광위원회 ⑥보건복지위원회 ⑦도시안전건설위원회 ⑧도시계획관리위원회
⑨교통위원회 ⑩교육위원회